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 (달라야 하는가?)

- 일시: 2024. 2. 24.(토) 오후 3시- 6시
-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 주최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org

□ 후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org

[진행]

■ 기초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노동조합정치와 좌파 계급정치: 2024년 총선이후 정치의 해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계급적 전망” (3쪽~)

■ 토론:

- 김형균 /노동전선 공동대표 “노동자 정치 세력화 vs 노동계급정치” (20쪽~)

- 백종성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운동 확대를 위한 제언” (29쪽~)

- 조상수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공동대표

“자본독재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노동계급 정치운동이 나와야 한다” (35쪽~)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URL :

<https://youtube.com/live/kZ7U9XFVcMU?feature=share>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이행과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길항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동학에 들어섰다. 신생 민주노조운동은 10년이 지나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기치아래 노조(민주노총)가 중심이 되는 계급연합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2004년 국회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정치로의 진출이기도 했지만 제도적 포섭이기도 했다.

그리고 의회진출을 디딤돌로 삼아 만든 결과는 미약했다. 노동계급 전체로 노동권의 전면적인 입법 확대는 지연됐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치로 비정규직등 노동권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노동계급의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은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을 추구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방침으로 제시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조직노동 중심으로 굳어졌고, 이는 결코 계급정치와 등치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계급정치의 가동,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등 핵심문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단어 앞에서 노동 및 좌파운동의 시계에서 더욱 멀어졌다.

앞으로 2024년 4월10일 총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이후 대통령선거까지 3년간의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전례없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소위 진보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구태를 반복되거나 재연될 것이다. 그것도 가장 우경화된 모습으로.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정치'는 무엇인가? 왜 한국은 좌파정당, 계급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이름만이 등장하는가? 노동계급정치의 의미를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분별하여 정립하고, 나아가 계급정당을 좌파중심으로 세울 가능성은 이제 정말 일말도 없는가? 지금 논의되는 '체제전환'은 과연 무슨 체제를 어떻게 전환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정말 늦은 것인가?

이 정치토론회는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에 서려고 한다. 과연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 지형에서 가능할지 타진하려고 한다. 정립을 통해서 기계적인 구별을 넘어서려고 한다. 취지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함께 하길 바란다.

“노동조합 정치와 좌파 계급정치: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의 해’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계급적 전망”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1.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같은가?1)

: 노조 반대파는 무엇을 해야했는가

한국 노조운동의 정치적 지형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는데서 딱 멈춤하는 적대적(?) 공생! 이것이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모습에 대한 요약이다. 4월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대대)는 양경수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정치방침안을 단일 안건으로 하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최직전에 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하면서 ‘표결안건 없는’ 대의원대회에 무려 700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이 모이는 아주 희한한 대의원대회였다. 그럼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였을까? 4월24일 대의원대회는 안건이 사라진 대의원대회였고 대의원대회의 존재이유인 대표성 있는 표결 절차가 없었던 대의원대회였지만, 다음해 2024년 4월20일 총선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도 했다. 표결없이 결정이 가능했다. 더 구체적으로 이후 드러날 과정으로 보자면 그렇다.

먼저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민주노총내 최대 정파인 국민파(전국회의-진보당)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전술을 민주노총 전체의 ‘대의’에 의한 합의를 통해서 이끌 교두보를 마련했다. 고로 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뿐이다. 이제 이 대의원대회의 ‘표결없는 결의’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중집)가 이후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방침을 내놓으면 이는 표결을 거친 ‘합의’로 기정사실화될 것이었다.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권상정에 대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토론을 하던 중집은 더 이상 4월 대의원대회처럼 안건 표결처리를 유예할 명분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의 반대는 대중적인 명분을 상실할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범 반국민파등은 이후의 대의원대회에서도 4월 대대에서처럼 위원장이 낸 정치방침을 반대만 한다면, 반대를 일삼는, 반대를 위한 반대파로 조합원들에게 낙인찍힐 것이다. 이미 당시 임시대의원대회 때 유튜브 창에서 이런 논조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다(나는 이런 댓글이라도 유심히 보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풍향과 정서를 읽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범 반국민파, 이른바 좌파와 현장파, 혹은 ‘비전국회의 정파들’은 임시대대에서 자신들의 반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줄곧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끝내고 말았다. 최소한 저지했다고 자기만족하면서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찝찝함을 안고서.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다. ‘최악’을 저지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차악’도 저지하

1) 출처: <전망과실천> <http://dem-labor.org/?p=7517>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같은가? (1) : 노조 반대파는 무엇을 해야했는가

2023년 11월 23일 / 권영숙의 낯선 새로움

키워드: 민주노총, 국민파, 노조 반대파, 계급정치, 노동자정치세력화, 패권주의, 조합주의

지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최선’인지를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말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분명히 인식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상태로 말이다. 이 점에서 이 대대에 대해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가 “질서있는 분위기에서 토론”이라고 보도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다.

마치 프랑스혁명이후 온갖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이후 1848년 혁명이 혁명이자 동시에 반혁명으로 치달았을 때의 구도를 구체제(양상 레짐) 대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질서 대 사회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내년 총선과 그이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정치전략을 정하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대회로 기록될 4월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노동계급정치가 거의 실종하다시피한 시간 속에 ‘질서있는 토론’으로 끝났다. 마치 모든 쟁점은 조직노동의 조직적 질서 속에서 화해적으로 기화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남기고서. 그리고 이후 민주노총 중집은 여하튼 단일안을 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싱겁고 형식적인 ‘결집’과 정파와 정당들간의 가식적인 ‘합의’의 날이 될 것임은 이 때 기정사실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토론’의 요체였다. 결국 내부적 사상적 이념적 적대를 가장하거나 포장한 ‘공생’의 질서 말이다.

‘노조 반대파’가 했어야 할 일

지난 4월 임시대대에서 현 집권파에 대한 반대파들은 줄줄이 일어나서 위원장의 안건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데 많은 발언을 할애했다. 하지만 의장인 위원장 스스로 총선방침에 대한 안건 표결을 철회하겠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게 무슨 실효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노조 반대파들은 안건 직권상정에 대한 쟁점을 부각하는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을까? 문제는 이것이다.

일단 이미 개회전에 ‘긴급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노조 반대파들은 직권 상정에 대한 반대 연서명을 전달까지 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것을 준비하진 못한 것 같다. 이는 연서명한 성명서 내용을 봐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제 상정 철회한 마당에 대회장까지 들어와서 줄곧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것은 위원장 흠집내기로나 보이지 과연 무슨 효력이 있었을까. 혹은 다수파에게 소수파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였을까. 게다가 대대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표결없는 ‘찬반토론’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문제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논의에 그쳤다. 집권 다수파는 위원장이 이렇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 직권 상정을 철회했으니, 하나로 뭉쳐 잘해보자고 ‘대승적으로’ 임했다. 반면 반대파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최대 정파가 이렇게나 패권적이면 안 된다는 지적으로 수렴된다. 이걸 결국 직권상정에 대한 재비판으로 수렴되어 순환적인 논법 이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파의 비판중 핵심인 패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주노총이라는 노조 조직에서 다수파가 패권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조직활동이나 정치에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당파적 입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중심화하려고 하고 조직의 방침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그 정치방침을 패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강제 직권 상정”은 하지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 반대파에 의해서 제기됐다. 그래서 현 집행부는 인정하고 물러섰다. 그렇다면 이 다음 스텝은 어찌 할 것인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질서있는 토론’을 해서 현재 집행부 제안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끝내려나?

적어도 노조 반대파는 현장에서 표결없는 찬반 토론을 잘 활용하여, 정세에 대한 입장, 노동계급

정치에 대한 입장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노조와 정당의 관계에 대하여, 원론적이지 않고 기본적이면서 정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했어야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안에서 노조 반대파들, 좌파나 전투적 조합주의자들은 모두 다음과 주장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첫째, 현 전국회의가 민주노총내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패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이며, 둘째, 민주노총은 하나이므로, 극구 분열은 피해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토론과 모양을 끝까지 지향해야하고, 셋째, 정치방침에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아니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조합원들과 정파세력은 없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계속 보였던 모습이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파의 위와 같은 입장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말인가? 좌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더 정확히 드러내고, 다수파에 대해서 입장으로서 분리 정립하고, 내부의 투쟁을 거쳐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소수파 (즉 러시아의 볼셰비키) 역시 그러면 영원히 다수파, 멘세비키들에게 절대 패권적이면 안되고, 러시아 좌파는 하나여야 한다고 공염불만 외쳤어야하는가? 혹은 지금 남한 민주노총의 '노조 반대파'는 다수파 멘세비키에 맞서서 민주노총은 하나여야한다는 공염불만 외칠텐가?

그리고 과연 이게 소수파의 정치적 노선과 메시지로서 타당한가? 이런 주장이야말로 어쩌면 다수파가 할 주장을 소수파가 하는 것 아닌가? 과연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어느 좌파, 소수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단결을 외칠지. 아니면 입장을 가지고 다수파에 대한 자기 정립과 태도로 대중을 향하여 설득하는 일에 매진할지. 이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다수파가 아닌 소수파, 노조 반대파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다수파를 향한 내적 사상투쟁과 정치투쟁에서 입장을 정립하여, 반대만 일삼는 반대파가 아니라 내용있는 반대파로 정립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답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반대파 주장의 공허함

그럼 이제 이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려 한다. 지금 순간부터 '악마의 변호사'가 되어보려고 한다. 도대체 그러지 않고선 쟁점화도 안된채 문제는 미궁속으로 더욱 빠질 듯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첫째, 다수파가 패권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다. 그 점에서 위원장의 직권 상정을 비판할 순 있다. 하지만 그가 철회하는 순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했던 많은 반대파의 말들은 공허해졌다. 아니 직권 상정에 대한 '비판' 말고 과연 반대파들의 정치방침이나 실천지침이 있긴 했나 싶다. 그리고 다수파라는 것을 방패삼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이지만, 패권 추구 자체는 어느 정파나 추구할 것이다.

패권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순화해보자. 어떤 정파나 당파든, 첫째 정세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부단히 정련해야하고, 둘째 그 입장을 가진 좌파는 노동계급운동과 결합을 절대적으로 게을리하지 말아야하며, 셋째 그 입장을 정치적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삼아 다수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즉 대중조직인 노조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으로 정치화하기 위해 애쓰고 내부의 '다수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다수파가 아닌 소수 정파들이라고 해서, 계속 소수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수파가 되기 위한 이념투쟁과 실천투쟁으로 대중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나? 반대파의 패권주의 비판은 현 다수파인 전국회의에 대한 비판치곤 웅색하다.

둘째, 민주노총은 하나이므로 분열을 피해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분열을 피해야한다? 이 주장이 민족주의파등 대동단결주의자들이 아닌 좌파, 현장파들에서 터져나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스스로 조합주의 (unionism)내에 머물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말할까? 즉 노동조합을 금과옥조, 지상 최대의 선으로 보지 않고서야, 무조건 단결과 하나됨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진짜 문제는 분열 혹은 분리가 아니라 분열을 억지로 만들고, 목표없이 분열을 일삼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가 아니며, 지금 한 정파의 입장이 절대적 다수의 입장이 되어 관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구성면에서도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간에, 산별 업종들의 ‘내부 차별’과 ‘격차’도 심하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라는 조합주의의 기치아래 몰아넣는 것은, 다양한 격차와 차별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방침에서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결국 이런 경제적인 조건과 산별 업종의 차이는 정치적인 이견과 차이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존재조건이 다른데 어찌 정치적인 입장이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차별과 차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내부의 차별과 이견을 봉쇄하고 미봉한 것일뿐이다.

의미있는 분열을 두려워말아야 민주노총이 계급적 노조로, 나아가 계급적 정치방침을 갖도록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회의가 정파적으로 나뉘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좌파 혹은 노조 반대파는 어떤가? 다수파에 대한 반대만 일삼고, 전국회의등 다수파가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사사사건 발목 잡기를 언제까지 할것인가? 만약 이러한 비판이 민주노총 다수 조합원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입장이 없는 것, 패권만을 문제 삼는 양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셋째, 마지막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 과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정치방침에 있어서 노동자정치세력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당연시하는 것은 맞는가? 즉 이것이 과연 ‘계급적 정치방침’과 동일시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계급정치의 중심이고 계급정당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 과연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인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비판과 지적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할 발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어나서 ‘토론’하며 구체화했어야 할 발언은 이것이었다. 아마 그랬다면 이 ‘안전없는 대의원대회’, ‘표결없이 토론하는 대의원대회’는 그렇게 ‘질서있는 토론’이 될 리도 없었고, 그런 오명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계급정치’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한다. 물론 이미 조합원들, 그리고 임시대의원대회 현장의 발언자들 중에선 슬그머니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이를 둘러싼 이견들이 은근히 드러났다. 그러나 은근히 말이다. 다수파와 노조 반대파 그들 양쪽은 모두 서로 치열하게 이견을 드러내며 반박할 쟁투의 지점, 아니 예각적인 쟁점화를 해야할 순간에 이르자, 슬쩍 정면 대결을 거부하거나 피하였다. 반대파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대했다. 이른바 패권주의 반대 담론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정치와 노조정치세력화라는 문제에 대한 노조내 좌파의 입장 정립과 발언 없이 과연 이 문제를 싸고 현재의 다수파 국민파 집행부를 넘어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2.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 좌파 계급정치

-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같은가?2)

노동조합이 만드는 정당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시작해보자.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방침에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당연시하는 것은 맞는가? 즉 이것이 과연 '계급적 정치방침'과 동일시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계급정치의 중심이고 계급정당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 과연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인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든 예들이 있다. 흔히 이른바 영미의 경로, 이른바 '앵글로색슨의 길'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경로이자 사회적 모델이었다. 미국의 노조들이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에 자신의 '정치적 대표정당'이 되어달라고 의탁하는 방법이거나 영국에서 노조가 기반이 되어 만들었으나 대리정치로 귀결된 '노동당'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를 노조가 주도하는 정당 즉 노조-정당(union-party)라고 하기도 하고, 흔히 '영미식 유형'이라고 한다. 이는 노조-정당(union-leftist) 관계나 정당내 노조(union in party)와는 구분되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노조와 정당의 관계 혹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정치세력화하는 특정한 경로와 모델일뿐 아니라, 나아가서 노동체제, 사회경제체제, 복지체제까지 아우르며 상호 '제도적 보충성'을 가지는 일관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영미식'은 단지 유형일뿐 아니라 체제이고 경로이기도 하다.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노조정당일지 좌파정당내 노조일지에 따라 노동체제도 복지체제도 연동하여 변화하였고 제도화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이 점부터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미식의 유형은 정치체제로서 사회민주주의가 결합된 서유럽의 사민주의와는 어느정도 구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사회조합주의 노동체제와 결합된 사회복지국가와도 다른 '최소 사회복지국가' 내지 자유방임적 국가였다. 영미식의 유형은 '조직노동'이 정치세력화하여 정당의 뼈대를 이뤘지만 결국 기존의 부르조아지가 만든 '자유당'을 대체한 '민주주의 보편정당'이 되었거나(영국), 기존의 보수적 정치엘리트- 주로 남부의 인종주의적 지역정당에 불과했던-의 민주당과 결합하여 조직노동의 배타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미국)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노동계급은 아니 노동조합은, 아니 민주노총은 형식적으로는 이미 영미식의 유형인 노조정당의 길을 시도한 적이 있다. 바로 민주노총이 창립하자마자 1기 권영길 위원장 집행부가 '국민승리21'이란 준정당을 거쳐 만든 '민주노동당'이 바로 일종의 '노조정당(union party)'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등 민주노조운동은 이 시도와 정치전략을 영미식의 유형이라고 보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위주의 정치방침을 정하면서도 이를 노조의 정치세력화라고 하지 않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혹은 나아가 '노동계급정치'인 듯 모호하게 일반화해왔다.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넓게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기도 했고, 노동계급의 정치화로서 '노동계급정치'이기도 했다. 하

2) 출처 <http://dem-labor.org/?p=7786>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 좌파 계급정치-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같은가? (2)

2023년 12월 7일 / 권영숙의 낯선 새로운

키워드: 노동계급정치, 노동자정치세력화, 노조 반대파, 노조정당, 좌파정당, 공산주의, 부르조아시민주의, 자유주의

지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랴!

그렇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살펴보자. 민주노조운동, 혹은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는 영미식의 길이 아니라는 말인데, 과연 민주노총은 무슨 수로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는, 노조가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화는 이들 미국과 영국과 다른, 그래서 '노동계급정치'일 수 있다고 자임하는가? 혹은 다른 미래를 자신하는가? 과연 조직화된 노동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등치될 수 있는가? 혹은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된 틀을 정치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해서 과연 계급정치일 수 있는가? 조직노동은 계급정치의 주체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노동계급정치가 애초에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고 어떤 이념적인 질을 가져야하며,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노동계급정치의 시작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부르조아지 시민들은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서 봉건제 하 군주와 토지귀족들이 독점한 '정치시장'에 진출을 꾀했다. 그것이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변경하고, 귀족들과 부르조아지들이 함께 정치를 논하고 결정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생결단의 쟁투를 벌이는 가운데,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급진화되어 자코뱅(산악파 급진파) 세력이 되어 '공포정치'를 하기도 했고, 이는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을 거쳐 입헌 군주제하에 토지귀족과 대부르조아지, 그리고 자유주의 부르조아지가 함께 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부르조아지는 규모면에서 도시안에서 커져가던 노동계급(막 '프롤레타리아'라는 신조어를 가지게 된 사회집단)의 동원과 협조가 불가피했고, 그것이 1848년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새로운 부르조아 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공화주의'라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1830년 봉기나 1848년 혁명이 곧바로 반혁명으로 돌변한 것만큼이나, 자본주의적 계급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념이었다. 그런 공화주의와 온갖 사회주의들을 이념적으로 대체한 것이 바로 1848년 혁명과 반혁명기에 칼 맑스가 집필한 <공산주의자 선언>에 명료하게 강령적으로 정식화된, 역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아니 공산주의 이념이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후 신분의회에서 부르조아지와 뿌띠 부르조아지 내 급진분파에 불과했던 왼쪽- '좌파(the Left)'는 이제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급진화되었다. 맑스가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온갖 '사회주의' 부류들까지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형성기를 거친 노동계급은 한편으로 또다른 '근대적 발명품'이기도 했던 '노동조합(trade union)'으로 결집하고 조직하는 과제와 더불어 좌파와 노조의 결합을 통한 계급정치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이중적 과제다! 그리고 동시적 과제다! 그리고 후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자유주의 정치로부터의 독자화였다. 1848년 혁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제 노동계급을 동원하기만 원하는 급진민주주의나 공화주의를 비롯한 온갖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대체하는 자신만의 계급적 이념을 내세우고 계급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만이 계급정치의 시작이 아니다. 혹은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가 반

드시 계급정치도 아니다. 이는 단지 계급 외부의 자본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동을 지배하는 자유/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대타적인 정립일뿐이다. 1789년 프랑스 부르조아시민혁명, 즉 부르조아(뿌띠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시민민주주의는 당시 부르조아지 계급과 동시에 출현하기 시작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적 동원은 하되, 정치적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보편참정권의 거부, 유산계급만의 정치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것을 '시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따라서 19세기 노동계급의 첫 번째 과제는 부르조아 시민세력, 즉 자유주의로부터의 독립 혹은 자립이었다. 이렇게 19세기 근대 정치의 형성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는 부르조아지 시민혁명이 군주제의 철폐도 이루지 못한 서유럽 전역에서 입헌민주정으로 '미완의 부르조아지 민주주의'로 귀결되어갈 때, 19세기 중반 '자본의 시대'에 이르러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압박 속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여하튼 노동계급정치의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외적인 자립은 얼마든지 혹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내부적 정립'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에서 노조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최초의 노조기반 정당인 (즉 좌파가 중심이 되어 노조의 계급적 부분, 선진적 노동자들을 규합하면서 만든 좌파정당이 아닌) 노동당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당시 유일 정당이었던 귀족계급의 보수당과 바로 직전에 창당한 온건 부르조아지들의 자유당에 대타적으로 정립하여 제3세력으로 나섰지만, 이후 우경화를 거듭하면서 자유주의 부르조아의 이해를 대변하였던 자유당을 대체하는 당이 되었고, 현재 보수당과 함께 양당정치 구도를 분점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이야말로 '자유-노동'의 정당화의 첫 시도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정치라는 이름으로 방어하는 정치체제의 핵심이다. 해서 내가 보기에 영국의 노동당은 외부적 정립의 성공, 내부적 정립의 실패 사례이다.³⁾

한국의 경우도, 이를테면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외주의적, 국수주의적 플랭카드를 내건 민주노총의 어느 건설노조 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역시 '노동자(노조)의 정치세력화'와 '이제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또 올해 국회 보궐선거에서 전주 강성희 국회의원 당선자처럼, 당선사례로 "민주당 고맙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걸고도 민주당으로부터 독자화라고 우길 수도 있다.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전주라는 지역이므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지언정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말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렇게 이념의 문제를 비껴나가고 있거나 좌파적이지 않은 이념까지 포괄할 수 있다.

이제 민주화이행이후 근 30년에 이르러 '양당정치'로는 안된다는 식의 분리선언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과 국힘내 비판세력들도 '양당정치' 극복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반이재명 세력이거나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 앞에서 정치권력투쟁과 공천을 향한 투쟁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레토릭들은 하나같이 '양당정치'를 문제삼는다. 하지만 그 '양당'이 무슨 양당이냐는 규정은 좌우 천차만별이다). 또 노조운동 안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대타적인 독립'은 이제 다들 말한다.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그리고 양당정치 극복은 잇을만하면 나오는, 소위 진보정치, 의회정치를 하자고 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양당정치 극복 레토릭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되기도 하고

3) 한국에서 여전히 일부 신좌파들이 영국 노동당을 노동정당, 심지어 좌파정당이라고 보는 것은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정치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해석과 입장 자체로도 한국의 정치 이념적인 한계와 낙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위성정당이 되기도 한다. 또 노동계급정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되기도 하고,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고 만다.

필자는 2011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하고 활동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노동계급정치의 시작은 자유주의로부터, 삐띠 부르조아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글쓰고 강의했었다. 필자의 2008년 박사논문 역시 “한국의 민주화, 동맹정치, 노동배제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양당정치 불가론’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은 나 역시 환영해야한다. 하지만 도저히 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씁쓸하다. 내용과 방향성이 없는, 혹은 내용과 방향성을 스스로 정립하고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편이 될 리 없는 외부에 대한 대타적인 정립의 목소리들이 자못 공허하다. 이것은 출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발하기 전에 정립하여야할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호성과 한국 자유주의정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노동정치는 대한 다수의 견해는 이렇게 정리된다. 민주당으로부터 독자화한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것이 노동계급정치다. 그리고 이것을 두루뭇술하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하기로 한다. 또한 계급이라는 말도 삭제한 ‘노동정치’라고도 말한다. 혹은 이들 대다수중에 또 다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조의 정치세력화와 등식화한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정치적 조직적 기초로 한 정당을 만들면 그게 바로 노동(계급)정치이고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것이다.

결국 핵심 단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근데 이걸 과연 무엇인가? 왜 계급정당이라는 말, 노동계급정당이나 노동계급정치라는 말을 극구 피하고 이 말을 사용하는가, 이는 자기 검열의 결과인가? 심지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즉 계급없는 노동정당, 아니면 계급으로 형성되지 않은 노동자, 아니지 정확히는 노조로 조직된 노동의 정당, 즉 조직노동의 정당을 계급정치라고 말할 수 있으려나?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론자들과 노조중심의 정당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은 여전히 모호하게 이 근처 어디를 배회하고 있을 뿐이다.

맑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말했고, “계급투쟁의 역사”를 말했는데, 한국에서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계급정치’는, 정작 중요한 ‘계급’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노조’가 좌파를 대체하는 정치를 노동정치로 내세우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과연 이럴진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뼈아픈 질문은, 왜 굳이 한국의 노동계급이, 그리고 좌파가 이 조직노동이 만드는 정당에 함께 해야하는가 라는 말이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볼 수 있다. 첫째, 예컨대 만약 현재 미국의 경우처럼⁴⁾ 민주당이 이

4)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집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27일 디트로이트에서 파업중인 미국자동차노조(UAW)의 피켓팅 시위에 참여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노조를 격려했다.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파업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미국은 ‘노조의 천국’이다. 근데 과연 미국이 노동계급의 천국인가? 조직노동은 과연 얼마나 이 체제에 포섭되어있는 것일까. 물론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80년대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면서 현재의 미국 노동체제를 재구축(안정화)한 이후 미국 노조들은 험난한 - 그러면서 전투성을 조금씩 회복하는 시절을 겪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파업현장에 나타나 피켓팅 시위를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에 한국의 ‘탄압받는 노조’와 지지자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계산된, 노골적이고 선동적인 외부 행위자”의 개입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 엄청나게 풀어놓은 ‘헬리콥터 머니’로 인한 유동성 위기, 인플레이션 압박을 임금 상승 유인(압박)과 연계하여 해결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상 출처 <전망과실천> 2023년 10월4일 “황제가 노동자 파업을 격려할 때, 제국은 다 속셈이 있다”, <http://dem-labor.org/?p=5967>. 그리고 나아가 이는 “제조업의 국내화(reshoring)와 조합주의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노동을 포섭하고 권력 일

재명 당대표가 조직노동에 대한 폭넓은 개량정책을 취하거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른바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 전략을 정치적으로 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노조정치세력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5) 혹은 자유주의 세력이 그렇게 입장을 좌쪽으로일보 선회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구호는 과연 살아남을까? 미국의 경우처럼 ‘민주당-민주노총’이 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6)

물론 현재 지형으로 보면 아마도 그런 일은 크게 구도가 바뀌지 않는한,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정치를 대표하는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만든 혹은 만들려는 정당을 무력화,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친노동정당이라는 식으로, 노동계급 다수를 향해 진격하거나 진격하지 않을 것이다. 알량한 노동정책 일부의 ‘개선과 ’개악‘을 반복하면서, 노동계급정치로의 전망을 계속 가릴 것이다. 보수양당이 현 정당구조를 유지하거나 거대 양당과 군소 다당제를 유지할 것이다. 즉 노조정당의 소수 약체화, 나아가 노조정당의 필패.

혹은 둘째, 지금 민주노총의 관료들, 조합주의자들, 전투적 조합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지반처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영국의 노동당의 경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전국회의라는 최대정파와 진보당이 나아가려는 방법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이 정당은 진보연합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는 진보정당들 역시 일제히 민주노총과 연계되는 진보정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좌파정당으로 나선 노동당(구 변혁당이 진보신당에 통합된)도 결국 이번 2024년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방향으로 많이 선회했다. 녹색당, 정의당 역시 ‘노동부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인지, 아니면 보편정당catch-all party로서 투표율의 한계를 경험해서인지 부쩍 민주노총등 조직노동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 결과로 2023년 9월13일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등 4개정당의 총선방침 합의문의 서명이 가능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전날인 9월12일 중앙집행위에서 이 내용을 단일 정치방침을 확정했고, 이로써 ‘노조반대파’가 반대할 명분은 4월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반납하였으므로 사라졌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4개정당의 합의문 서명식 다음날인 9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933명 중 770명(82.5%)가 찬성함으로써 ‘반대없는 합의’가 이뤄졌다. 단지 반대는 한 대의원이 안건 제안문중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내는 방식으로”라는 표현에 대해 “아래가 있다면 위가 있다는 의미”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없앴다고 하는 후문이다.

참으로 질서있는 퇴각에 이어 질서있는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것도 민주노총 전체와 이른바 진보 4개 정당까지 합쳐서 만든 정치방침이다. 근데 이 합의는 또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교적이기도 한가. 민주노총과 4당 합의문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확정된 안이기도 하고 대대에서 통과된 안이기도 한 이 정치방침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2024년 총선에서

부를 위임하거나 나눠주면서 노동계급운동의 급진화를 막고 그 권력 자체를 국가에 복속시킨 독일 파시즘이 ‘조합주의 국가’의 원조였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단지 ‘표’를 겨냥한 ‘정치’만은 아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맞닿은 국내 산업전략, 즉 제조업의 국내화 이른바 reshoring 또는 re-industrialization (재산업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노조가 곧 산업정책” (Trade Unions are industrial policy)“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9일 <전망과실천>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노동계급의 파업은 어떻게 다른가“, <http://dem-labor.org/?p=7331> 참조.

5) ‘자유-노동동맹’개념에 대해서는 필자의 출고,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체제의 ‘이중전환’” (2018), <경제와사회> 117호 참조.

6) 민주노총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그 점에서 현재 조직노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숙, “민주화 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2017), <사회와역사> 115집 참조.

는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총선에 공동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 자료: 이하 9월13일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 합의문)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노조정당'이 혹은 '계급연합정당'이 계급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랴? 영국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 좌파 블록도 대거 진출하여 노동당내에 자리를 잡았고, 의원 내각제하에서 노동당을 통해서 의회에서 정치를 했고 집권도 수없이 했는데 그들이 과연 무슨 '노동정치'를 했던가? 그것이 '노동계급정치'이긴 했던가? 아니면 그것 역시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치였을 뿐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굳이 노동정치를 독자적으로 구분하였던가. 구분할 실익이 무엇인가(노동계급의 편에서). 또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때 노동조합이 기반이 된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본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던가.

노조들이 기반이 되어준 영국 노동당은 결국 앞에서 언급한대로 부르조아지 계급이 만든 자유당을 대체하면서, 양대 부르조아 정당중 한 정당으로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정권도 번갈아 가져갔다. 조직노동(노조)는 그 정당에 노조간부들을 수혈하여 공급하였고 정치적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물질적인 '화수분'이 되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만의 배타적 이해를 노동당을 통해서 보호받고 이를 노동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그 정책과 제도는 전계급적일 리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가능했을까?)

혹은 영국식의 경로가 아니고 독일식 경로대로 사민주의 정당을 만들고자 할 수 있다. 그것이 목표이자 정당정치의 정체성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그 노선을 말해야한다. 애매하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하지 말고. 혹은 "노조주도 연합정당"의 결성이라고 애매하고 말하지 말고. '연합정당'이란 말 앞에 붙는 수식어는 분명히 계급이나 노동이 아닌 '진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연합정당'은 2026년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치의 프로그램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언제나 무슨 진보인지 분명치 않았다. 분명하지 않은 이념, 탈이념을 표상하는 것이 '진보'였다. 그리고 진보인척 하기 위한 진보, 진보를 자칭하기 위한 진보가 도처에 유행처럼 출몰하는 것이 한국의 운동정치, 제도정치다. 마치 19세기에 봉건 토지귀족부터 부르조아, 뽀띠 부르조아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온갖 사회주의'를 참칭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까지 자기 주장한 것처럼, 이 사회, 21세기 남한사회에서 진보는 과연 무엇인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이유는 이 말이 모든 '분별'과 '정립'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대혼란의 시대에 혼란을 줄이고 각자 정립하고, 함께 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한다고 해서, 일부 노조 관료들이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중심이 되고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 되는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노동계급정치'라고 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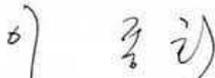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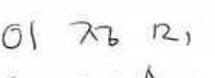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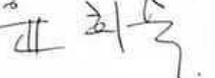
7) 이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통렬한 회고이기도 한 켄 로치 감독의 3부작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 그리고 <나의 올드 오크>를 보기 바란다.

민주노총 - 진보정당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의 대표자들은 9월 13일 회동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노동, 민생, 민주, 생태, 평화를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024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2.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공동 대응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거대보수 양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2024년 총선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제도 개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4.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등 당면한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및 역사 지우기에 맞서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노동당 공동대표	이 중 회	
녹색당 공동대표	김 찬 휘	
정의당 대표	이 정 미	
진보당 상임대표	윤 회 숙	
민주노총 위원장	양 경 수	

자유주의정치로부터 독자화란 - 차이, 분별, 정립

위와 같은 이유로 자유주의정치로부터 독자화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는 단지 민주당등 자유주의정당에 대해 조금 다른, '진보적인'정당들을 외부에서 따로 만들거나 노동자들이 더 정확하게는 노조가 정당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그대로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독자화이다. 그것은 첫째, 한국 노동이, 조직노동으로 구성된 노동이든 뭐든간에, 계급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 조직노동이 아니라 계급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주도해온 부르조아와 뿌띠 부르조아의 정당정치인 자유주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자화여 자신의 계급정치를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정치로부터 독자화는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다. 그래서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라는 말이 정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동계급정치는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정당을 다른 정치, 다른 최종적인 지향을 가진 정치, 즉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를 향한 교두보로서, 운동적인 쓸모로서 ‘의회’와 선거정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한다. 심지어 현재의 한국의 좌파와 노동계급운동을 둘러싼 지형으로 보면, 한국의 계급정치는 지금이야말로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부터 스스로 반정립되어야한다. 여기서부터 첫 걸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노동계급정치는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이 자유주의정당과 다른 정당을 만드는 형식적인 조직적인 분리가 아니다. 단순히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정치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자들이 의회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동계급정치는 자유주의로부터 내용적 이념적 분리와 정치적 독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자유주의정치로부터 형식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제3당’ 혹은 ‘제3시대’를 만드는 의미로 중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정치사상을 갖지 못한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경도됐던 그간의 흐름을 끊고,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의 외부에서 발현한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론을 자신의 계급적 사상과 정치적 이념으로 삼는, 내용을 갖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노동계급정치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2023년 4월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미정립’, ‘미분별’, 그리고 ‘미분화’된 상태였다. 서로 열심히 반대하고 찬성하지만, 사실은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크게 내용과 메시지에서 차이가 없다. 나아가 9월1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4월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제출됐던 안건에서 차이없는 ‘노조 정치세력화’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냈다. 차이라면 그 6개월동안 진보당,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등 4개 정당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전략에 다들 발을 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순서도 참 흥미롭게도 9월12일 중앙집행위 단일안 확정, 9월13일 민주노총과 4개정당 합의, 그리고 9월14일 임시 대의원대회 표결이다. 하지만 이를 표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4.24 대대의 ‘질서있는 토론’은 결국 9월14일의 ‘질서있는 표결’로 마무리되었다. 그 어디서도 노동계급정치의 방향을 두고, 그 정치이념을 두고 격렬한 ‘사회변혁적’인 토론도 쟁투도 없었다. 과연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만 있어도 될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결국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정치적 기관’으로 혹은 ‘정치적 엔진’으로 생각한다. 기관과 엔진은 있으나 사상과 지도가 없는데 그것은 노동자주의라는 애매한 주의로 대체한다. 노동자주의 (workerism)는 87년이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의라는 악조건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좌파가 아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치정당화의 길을 열었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였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의 민주노총등 민주노조운동은 노조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범계급연합정치일 것이다. 계급정치 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없는 노조정치 일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가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조의 경제주의와 정치에서 의회주의라는 쌍날개를 주축으로 한국 노조운동의 우경화, 조합주의화, 그리고 정치적 독자성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조 정치세력화로, 나아가 노동자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 대신 적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것쯤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계급정치로서의 독자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급정치와 좌파의 부재속에서 노동자

의 정치세력화는 결국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자화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계급정치는 여전히 이렇게 출발선에서 서성이고 있다.

결국 다르지 않으니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 차이가 없어진다.
차이가 없으니, 정립을 하지 못한다.

3. 정치동맹과 노동계급정치: '정치의 해'에 대한 계급적 전망⁸⁾

한국의 진보정당사: 노동없는 진보정치, 진보없는 노동정치

한국의 진보정당사는 1987년이후 패배와 비루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조금의 세를 얻은 후의 모습은 외려 최악을 향한 경주같았다. 모두의 동의에 기반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의 전신)의 시작은 전노대의 후신인 민주노총이 창립한 후 그 초대위원장이 1대 위원장 임기조차 채우지 않고서 이뤄진 소위 '민주노조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리고 이렇게 산하 민주노조들의 동의를 정상적으로 구하는 과정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정치방침을 내지르는 관행은 이 최초의 선례가 결국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대세는 그 결과로 인하여 일부 정당화되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10석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1석 줄어든 9석)으로 국회 진출이라는 수확을 이뤘다. 이는 좌파운동과 사회주의정당을 말살시키고 수립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정치체제 하에서,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행이후 최초로 '노동정당'의 원내 입성이라는 '쾌거'가 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은 노동계급정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노동계급정치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स्पष्ट하게 확인해야할 것은, 이 성과가 바로 노무현탄핵 반대운동, 즉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정치를 구사하면서 대표적인 반노동정권으로 기록되어질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전선에 일부 탄핵반대운동 좌파를 제외하고 다수의 '진보'세력과 민주노총 주류가 모조리 함께 했던 이른바 '노무현 살리기'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점이다. 우파정당의 노무현 탄핵 시도 불발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는 마치 전리품의 공유와 배분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반탄핵운동의 여세를 몰아, 다가온 총선에서 이룬 승리였으니.

결국 이것은 이른바 노조정당의 최초 원내 진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그 무엇이라 불리든간에, 바로 이들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결탁 혹은 나의 규정으로 한다면 '자유-노동 동맹(lib-lab coalition) 정치의 명실상부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 해방후 최초의 좌파정당의 의회진출이라고 일컫던, 빛나는 승리의 뒷그림자였다. 그리고 2004년 선거이후 오늘날까지 진보정치의 흐름과 행로를 보라 (이렇듯 오늘 하는 정치적 선택은 오늘 의 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지않은 미래에 대한 빛이기도 하고, 나아가 미래의 질곡이

8) 출처 <http://dem-labor.org/?p=8824>.

계급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없는 노조정치 - 19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 진보, 그리고 좌파

2024년 2월 22일 / 권영숙의 낯선 새로움

키워드: 민주, 진보, 좌파, 진보정치, 계급정치, 동맹정치, 자유-노동동맹, 자유-시민동맹, 자유주의 헤게모니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민주화이후 동맹정치

근데 여기까지 언급한 역사는 단지 민주화이행이후 '진보정당의 역사'일 뿐이다. 정치사회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노동동맹정치 역시 2004년의 반노무현 탄핵운동이후 지지부진하였을 뿐 아니라(이는 비례대표제 실시에 대한 민주당의 사보타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직노동의 끊임 없는 구애 혹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정치는 노동 포섭보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민동맹(lib-civic coalition) 정치에 기초한 범민주연합정치를 지속했다. 그것의 정치체제적인 표현이 '노동배제적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였다.⁹⁾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가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원칙적인 기조로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 조직노동, 진보정치운동은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벗어나지 못한채 한편으로 정당은 계급정당 아닌 '진보정당'운동을, 다른 한편으로 조직노동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unionism)와 노동자주의(workerism)에 매달려서, 좌파-노조의 결합으로서, 좌파중심의 노동계급정치가 시작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에서 '주체'의 문제가 있다: 이른바 '민주노조'가 만드는 노동정치의 한계와 좌파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진보좌파'의 문제,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세계정치사속에 한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한편으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등장한 민주노조운동과 좌파/정당운동이 맺는 관계라는 문제가 있다. 알다시피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자체는 좌파정치든 노동계급정치든 이것들과 자연발생적으로 결합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이에 대해서 '외부론(혹은 전위론)' 그리고 '양날개론' 등 다양한 관계론이 제기된다). 특히나 한국 같이 노동조합운동이 좌파운동보다 과잉발육된 나라에서는 노동정치운동을 노조가 주도하거나 정치운동에 나선 좌파는 약체화되거나 나아가 허약하다. 그에 비하여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는 강화되게 된다. 이는 한국의 87년이행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사례는 노조-좌파 관계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좌이자 그 사회정치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다. 이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의 역사를 복기해보자.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의 자기 전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은 당시에 결성된 민주노조 결성 붐을 타고 만들어진 2천여개의 민주노조를 주축으로 하였지만 노동자정치운동 조직들까지 망라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광의의 노동운동이었다. 노조와 비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나아가 노조와 노동단체, 그리고 변혁적 노동정치운동까지 포함한 노동운동. 노동자대투쟁이후 발족한 전노협에는 민주노조뿐만 아니라 전노협등 노동단체들도 가입해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노협을 해산하기도 전에 발족한, 사무직 업종회의와 대기업 노조들이 주도하여 만들었던 민주노조들의 연합체였던 전노대는 노조만 가입하는 '노조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전노대를 계승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성격이 되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들은 해고자와 '초기업적인 고용관행에

9) 이상 논지에 대해서는 권영숙,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노동좌파의 위기: 87년체제 전환 이후의 방향과 가능성"(2022, 민교협 정치대토론회),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연합정치의 가능성"(2011, 비판사회학대회), Young-Sook Kweon (2008, Columbia Univ. Diss.) 참조.

농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수록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사태로 터졌다. 하지만 이 문제 이전에도 노조 가입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배제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외부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으로 전화를 거쳐, 노조운동에서 ‘이익집단정치’로 전환하는 자기 전화를 거의 마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¹⁰⁾

민주노총의 이익집단정치- 주로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에 비판적인 현장조직들 역시, 노동자주의(생디칼리즘)를 강하게 드러내며 노조운동을 전투적 정치기관으로 보기도 했다. 이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는 비교사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노동의 정치적 채널이 노동의 산업적 채널(즉 노조 결성, 단체행동, 단체교섭)등보다 지연되거나 유보됐던 나라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했듯이, 노동운동, 노조운동 자체는 계급운동으로 정립이나 좌파의 문제의식을 보증하지 않으며 동일체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계급형성(class formation)’과 계급의 경제적 구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하에서 등장하고 성장하고, 87년이후 조직화된 노동계급은 경제적으로 형성되었을 뿐, 여전히 ‘계급형성’의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안고 있다.

게다가 남한 사회에서 계급 형성은 민주화 이행으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대중적 노조운동의 시작으로 해서 좋은 출발점을 가졌으나, 그 성공이 오히려 계급형성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의도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노조들의 경제투쟁이 70년대 80년대 민주화를 거친 어떤 국가들보다 눈부신 임금인상 및 소득재분배를 가져왔으나 이는 동시에 역으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배타적 내부시장 형성, 자본의 비정규직 도입과 이에 대한 노자 담합의 구도 형성을 가져왔고, 이는 계급형성을 위한 정치적 통일성의 기초를 현저히 악화시켰다. 경제주의와 노동자주의는 조합주의로 귀결되었고, 문제는 언제나 조합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합의주의일뿐 아니라 조합주의다. 그리고 노조가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로 머무는 한, 조직노동의 이익집단정치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를 일정정도 인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안의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세력이 사회적 합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노정교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지만 서유럽 식의 ‘사회조합주의’와 사민주의를 기각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 진보, 그리고 좌파

근데 또 다른 문제로 소위 좌파가 가진 허약한 당파성과 문제의식이 있다. 이행이후 한국 좌파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는 바로 스스로 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치없는 정파세력으로 존립하면서 계급의 정치화를 오랫동안 시도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정치운동은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치정당운동으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좌파’와 ‘진보’의 애매한 혼용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는 진보좌파이면서 진보를 좌파 너머 외연으로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80

10) 이 글에서 ‘노동운동’은 단지 노조 혹은 노조운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조운동, 정치적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의 정치적 사회적 동맹정치로 넓혀서 보는 개념이다. 그리고 필자는 ‘노동’ 혹은 노동운동’은 하나의 단일한 전체(entity)이나 통일체 혹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있다. 즉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은 모두 질적으로 구분해야하는 개념인 동시에, 이들 간의 경계는 상호 유동적이며 시간 속에서 그 질은 변화할 수 있기도 하다. 대체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노동운동은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제도적으로 포섭되어 가는 가운데 점차 ‘노조운동’으로 일원화되고(혁명운동, 변혁적 정치운동과 분리), 나아가 노동조합원들의 조직된 이해를 배타적으로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조직노동(organized labor)’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때로 역진적인 방향, 즉 조직노동에서 ‘노동운동’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혹은 일국적 노동운동 내부에서 3가지 경향성이 혼재돼 상호 긴장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기도 한다”. 권영숙 (2017),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집 참조. 위 출처 286쪽.

년대에 변혁운동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를 향한 체제변혁을 지향하던 운동)으로 불렸던 것이 좌파였다면,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는 정초선거에서 집권한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한편으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강고한 가운데에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깨고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만들어 갈 때 이들은 그래도 스스로를 유일한 진보로서 좌파, 그래서 '진보좌파'라고 자임하였다. 그러나 좌파는 이후 오랫동안 민주 대 반 민주 구도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기는 커녕 '진보'라는 이름하에 민주세력과 범진보를 형성하면서 수렴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진보는 좌파와 분리되었다. 좌파는 진보의 일부이고, 진보는 좌파와 우파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민주(개혁), 진보, 좌파의 3자의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계급적인 좌파정치가 정파운동과 정당정치로 분화하면서 좌파중심의 계급정치의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좌파는 정파로만 존재하고, 정치정당화의 길을 한참동안 모색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느덧 민주노조운동에 전적으로 기대는 '정파' 조직들이 되었다. 그들은 민주노총 중심의 노조정당이나 '노동자정치세력화'란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이 노조운동에서 조직노동으로 자기전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계급적인 성격, 나아가 노조 내부의 반노동적 행위들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였다. 정파조직들은 노조 선거에서 패권을 장악하는데 골몰했을뿐, 민주노총을 좌파적인 계급적인 노총으로 만들겠다는 정확하고 원대한 플랜이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즉 노조의 조합주의와 노동자중심주의 앞에서 좌파로서 자신의 독자성도 지도력도 가지지 못하고 노조에 의존하거나 기생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한 좌파를 '노조좌파'라고 부른다. 결국 정당정치가 아닌 정파운동으로서 오랫동안 민주노총 옆에 존속해왔던 현존 좌파 역시 좌파로서 정치적으로 구별 정립하는데 실패하였다. 심지어 이들 역시 지금은 스스로를 '진보좌파' 혹은 진보/ 좌파라고 두 개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 진보와 좌파는 분리될 수 있는가. 아니 좌파 아닌 '진보'가 가능한가? 좌파는 스스로 자신을 좌파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 아닌 정체성부터 명확히 정립해야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운동의 분화를 보면, 87년 민주화이행후 한국에서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없이, 노동의 문제설정이 치열하지 못한 채, 지식인과 학자들과 돌아온 운동권들이 노조운동과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래서 이들중 일부는 '강단좌파' 혹은 '시민적 좌파'라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현장 노동과의 연계도 사실 부실하다. '진보'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90년대 초까지 진보와 좌파가 하나였던 시절을 거쳐 이제 '진보'라는 외연은 갈수록 넓어지고 막연하지만, 이는 소위 진보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노동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노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노동 현장과 일상적인, 조직적인, 투쟁적인 결합력도 약한 진보정당세력이 어떻게 노동에 대한 좌파적, 진보적 지도력을 갖추겠는가. 선거 때만 나타나서 표 달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자유주의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승리 21, 그리고 민노당은 노조 기반의 정당이고, 노조가 가장 많은 내부 발언권을 행사하지만, 그 정당도 결국 '노동'없는 진보정당의 하나가 돼버렸다. 사실 민노당의 사례는 흥미롭다. 노조기반의 정당, 사실상 조직노동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당이지만, 이 정당이 노조현장과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인가는 그 강령과 활동방식, 의정 활동등 여러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 농민 뿌띠부르조아지를 포함한 계급연합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확할듯하다. 또한 NL(민족해방)계열, 즉 민노당의 주류였던 분파가 가진 '민족문제'와 노동에 대한 모호한 입장 탓도 있다. 민주당 다수파였던 이들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

한 '햇볕정책'을 이유로 '김대중 퇴진'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또 그 과정에서 심하게 의회주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현장과의 결합이 약한 탓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노당이 내세웠으며 가장 인기를 끌었고 스스로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 강령인 '무상 급식', '소상인 살리기', '금리 낮추기'가 어떻게 노동강령일 수 있는가. 그외에 노동시장의 개혁,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시도, 그리고 노동과 연계된 조세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있었는가.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도입 과정에서 민노당의 갈짓자 행보는 과연 노조정당의 의회주의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이 정당이 계급정당으로서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요약하면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는 겉으로 보면 노동없는 진보정치, 진보없는 노동정치의 역사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는 노조가 주도한 정당화의 문제가 부각됐고, 그 과정상에는 진보정당에서의 노동 부재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둘 다 문제다. 결국 '때늦은' 노동정치의 시작과 '때이른' 진보의 '신좌파'화 혹은 탈노동화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계급없는 진보정치, 좌파없는 노조정치를 넘는 노동계급정치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동안 진보와 노동이 서로의 존재 부재로 인하여 고통받았을 때, '노동없는 진보정치와 진보없는 노동정치'의 표면을 걷고 보면, 정작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은 조합주의와 조직노동을 넘어서는 '계급'의 문제의식, 그리고 진보와 노동자주의 양자를 뛰어넘는 좌파의 이념적인 지도력(헤게모니)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계급정치 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없는 노조정치라는 두 가지 정치세력화의 방식만이 쌍생아처럼 나란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어느 것도 좌파 중심의 계급정당은 아니다. '진보정치'라는 단어 앞에 아무리 여러 새로운 주체들, 즉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주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그리고 이제는 그 모두를 버무린 '민주개혁진보' 연합을 붙인들, 그것은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들 단어들, 즉 민주, 개혁, 진보는 이미 오랫동안 '자유주의 정치'안에 포섭된 '기표들'일 뿐이다.¹¹⁾

지금은 계급없는 진보정치를 벗어나 계급정치와 계급정당을 세우고, 좌파없는 노조정치를 벗어나 좌파중심의 계급정치를 세워야 할 때다.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독자적인 한국의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의 시작은 여기에 달려있다. 나아가 계급적 관점의 좌파정치가 바로 설 때야말로,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사회적 계급적 동맹정치도 가능하다.

11) 그 점에서 2024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내세우며, 진보정당 일부와 '시민사회'를 끌어들이고 만든 정당의 이름이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름마저도 민주, 개혁, 진보세력 등 모두를 끌어들이는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말형'이 되어 구사하는 자유주의 헤게모니하의 민주개혁 진보정치, 이것이야말로 내가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 정치라고 분석하였던 것이다 (2008년 박사논문 및 2012년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연합정치의 가능성" 발표문). 이것이 이름이나마 가시화되기까지 12년이 흘렀다. 그만큼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는 민주화의 효과를 홀로 독점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제한하여도 문제없었고, 그동안 급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중 소위 '386'은 독점적인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한 부분일 뿐이다. 왜 자유주의 비판이 아니라 386 비판이 득세하고,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이 이들에게 집중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vs “노동계급정치”

김형균 (노동전선 공동대표)

아래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작성을 요청받았다.

- ① 87년 민주화 이행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정치
- ② 현재 민주노총+4개 정당 선거방침 등 정치전략에 대한 평가
- ③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구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과 방안

우선, 정세의 특수성으로부터 “정치세력화”에 대한 진단과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피력한다. 다음에 요구받은 토론문 소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노동자 정치의식 관련과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의 단상으로서 ‘선거 시기 노동자계급의 태도’를 보론으로 제출한다.

1. 객관 정세의 특수성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그 안에서 발전한 생산력 간의 모순이 너무나도 심대해진 나머지 과잉생산이 항상 적이고 거대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 전형적이고 격화된 형태가 바로 1930년대의 대공황이었는데, 제2차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파괴와 살육에 힘입어 전후 1960년대까지의 ‘장기호황’ 국면이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재격화되었다. 1970년대 대공황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금융자본의 세계적 약탈이 판치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연명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발 공황으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약탈경제 시스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양적완화 등 땀질 처방으로 버텼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패권을 확보한 미 제국주의는 그 헤게모니가 약화하면서, 각국(독점자본)은, 경쟁·대립, 이합집산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 횡포에 맞서 이른바 글로벌 싸우스 국가들이 브릭스로 뭉치고 있다. 이는 이전에 미국의 방해로 실패했던 비동맹 운동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국제적 패권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이 계급투쟁 자체는 아니다. 러-우전쟁, 이-팔전쟁이 연이어 터지고, 대만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핵무장으로 인해 제국주의 간 열전은 저지되고 있으나, 국가 간에 새로운 먹거리를 둘러싼 살벌한 경쟁이 국제 정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국주의 전쟁 국면이다.

국가권력은 독점자본에 대한 공황 구제에 따른 정부부채(공기업 부채 포함)는 늘어만 갔다.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 착취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고용의 유연화 전략으로 불안정 고용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자본에 의한 초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내부 분할통제를 관철했다. 그런데, AI로 표현되는 기술 발전의 자본주의적 이용에 따른 생산력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그릇으로는 더는 담아내기 불가능할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과잉생산에 따른 상품은 넘쳐나지만, 실업과 반실업으로 인한 빈곤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자본의 정치부대들이 자본주의 착취체제 유지·재생산을 위해 ‘기본소득’을 화두에 올리고,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투기자본의 거두가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미국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할 것을 주문하는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정치위기·체제위기를 잉태하면서 필연적으로 정권은 점점 폭압적인 국가기구의 본질을 노골화하고 있다. 극우 파씨즘의 발호가 그것이다.

정세의 객관조건은 혁명이나, 핵전쟁을 통한 인류 절멸이나의 귀로에 서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 땅의 변혁세력은 노동자계급이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전화할 수 있는 조직계획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선전·선동·조직 일반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이 전 부면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직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체제 전환”의 개념을 검토하고 엄밀하게 재정립하는 것, 그로부터 ‘노동자 계급정치’, 그 ‘정치활동의 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2.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계급 정치

1) 노동자 계급정치란?

우선 일론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戰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된 단결이다.”……“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라는 것을 살펴보았다.……[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히 생산력들의 양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본래의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과 아울러 계급대립의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선언 중)

노동자계급 정치는 곧 계급투쟁이다. 그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다. 한마디로 혁명운동이다. 혁명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투쟁, 경제투쟁의 영역에서 수행된다. 이는 임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계급투쟁의 조직적 무기가 필요하다. 첫째, 노동자계급의 참모부로서 당이 필요하다. 당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전술운용을 비롯한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계급적 각성과 단결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전술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레닌은 “혁명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대중을 즉자적 이해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치·군사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투쟁 경험만으로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과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매시기 엄밀한 정세·정치 보고, 일상적 선전·선동의 조직화, 목적에 부합하는 전술 구사가 가능한, 혁명적 지식인과 선진노동자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적 실천적 구심이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노동자 계급정치, 정치세력화는 과학적 사상·이론에 근거한 정치노선에 근거하여 대중운동을 지도·안내할 수 있는 주체를 전제한다. 그러한 주체가 없는 조건에서는 혁명운동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제1과제가 된다.

3. 87년 민주화 이행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정치

1) 1980년대, 광주 민중 학살과 혁명적 노동운동의 부활

광주학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가공된 민중들의 허위적인 인식은 벗겨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

게 되면서 근본적인 변혁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5·18 이후, 각성한 학생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힘의 원천인 노동 현장으로 물밀듯이 들어간다. 이어 1985년에 있었던 구로동맹 파업은 변혁적 노동운동이 조직적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1986년 '5.3 인천항쟁',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폭발한다.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파쇼지배를 무력화시키고 대중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열었다. 특히 당시 노동자 대투쟁은, 저임금·장시간 노동·병영적 통제 등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던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자, 노동자계급이 사회변혁의 중심부대임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소수 활동가에게 머물렀던 '노동해방 사상'이, 이 대투쟁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선진노동자의 이념적 지향으로 되었다.

투쟁의 성과로 조직률을 급상승하고 어용 한국노총과 다른 자주·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전면화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조 지역별 협의(연합)체는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했다. 전노협은 '노동해방, 평등세상 실현'의 기치를 강령에 명확히 명시했고,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변혁 지향성'이라는 '민주노조'의 지향과 기준을 대중화시켰다. 이는 해방 공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후 단절되었던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운동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사회구성체' 혹은 '사회성격' 논쟁을 비롯한 혁명노선을 둘러싼 연구와 논의가 전면화되었다. 정치·조직 노선은 다를지라도 모두 혁명노선을 둘러싸고 경합했던 시기다.(NLR, PDR, NDR) 맑스-레닌주의 사상·이론이 부활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사회와 변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심화하였다. 인민노련, 삼민동맹, 사노맹, 노동계급 등등 혁명적 정치조직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어 치열한 정치활동을 벌였다.

2) 1990년대, 변혁 운동의 급격한 우경화와 민주노조 운동의 일정한 상승

1991년 쏘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 해체되자 혁명조직 활동가들은 전망을 상실하고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상당 부분은 변혁운동 전선에서 퇴각해서 살길을 찾아가거나, '개량적 시민주의' 운동으로 전향했다. 합법주의 운동으로 전향한 한 축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그 흐름이 이후 대략 30년간 이어져 온 이른바, '진보정당' 운동이다.

이 시기에 포스트-맑스주의니 시민운동론이니 하는 소부르주아 이론이 대거 유입되었고, 물 계급적 시민운동(경실련 등)이 창궐했다. 김영삼·김대중 등으로 표현되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으로 등극하면서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대립물로 전화했다.

노동자계급의 진출을 경험한 지배계급은 3당 합당,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등을 통하여 지배체제를 재정비하고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을 장악했다. 그들의 피억압 민중에 대한 대 반격은, 전투적으로 투쟁하던 전노협 해체에 화력이 집중되었다. 한편으로 김영삼의 '신노사관계 구상' 등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을 전면화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 임금인상 등 최소한의 경제투쟁조차 단위 사업장 자본가를 넘어 총자본(자본가 단체와 국가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정세로 전환된다.

'민주노조' 운동은 "사수! 전노협"을 내걸고 방어투쟁에 집중하는 한편, 1995년에 '전노협'과 '대공장노조 연대회의', '업종회의'가 총 망라된 민주노총을 건설한다. 민주노총은 96년 말~97년 초,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면서 투쟁에 최고치를 찍는다.

3) 1997년 이후, 개량주의 노동운동 확산

1997년 말, 금융·경제위기를 맞아 민주노총은 시험대에 올랐다. 19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사회적 합의주의)에 참석하여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도입을 합의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전노협이 담지했던 변혁적 지향과 전투성은 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후퇴하게 된다.

한편 노동자·민중운동은 그간의 투쟁 성과를 모아 ‘국민승리21 (97.8)’을 거쳐 ‘민주노동당’을 창당(2000.1.30)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더불어 개량적 노동운동의 전형이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방침은,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부르주아 의회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내로 가둬 버렸다. 민주노동당과 그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급기야 야권연대라는 물 계급성에 기인하는 전술적 오류를 반복하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로 일거에 무너진다.

결국, 노동운동의 혁명적 이념은 퇴색하고 전투적 노조에 이어 개량주의적 정당조차 없었다. 대략 2007년 경제위기,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이후,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76일간의 옥쇄파업 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고립 분산적인 투쟁이 진행되었다. 점차 단사 차원의 대중적인 파업투쟁 동력조차 약화되고 대중파업 투쟁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노조가 줄어들었다. 급기야 농성·캠페인·고공농성·오체투지·단식 등 무기력한 투쟁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렸다.

노동운동의 후퇴는 자본의 탄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변혁적 지향이 거세된 정치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후퇴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따른 전반적 위기의 일상화, 독점자본간 대립과 경쟁으로 언제 핵 참화로 몰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개량주의·사민주의적 지향은 결코 개량조차 쟁취할 수 없다.

4) 조합주의, 개량주의 정치

지난해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둘러싸고 쟁점이 뜨거웠다. 그 귀결은 이른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힘을 합쳐서 국회와 지자체에 진출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선에서 비례대표 몇 명이라도 건지자는 것이 ‘총선방침’ 논의의 계산서다.

이러한 제도권 중심의 정치세력화 경험은 과거 민주노동당, 통진당 시절의 경험이 최대치다. 이러한 성과조차 가능했던 것은 8~90년대 대중투쟁의 파고와 경험이 배경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면 남미 좌익 대중연합주의 정권의 약진이 있고, 이미 오래전에 독점자본의 정치세력이 된 유럽 사민주의를 떠올릴 수 있다.

일찍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 앞에 계급타협 모델로 형성된 유럽 각국의 사민주의 정권(영국 노동당 포함)은, 독점자본의 정치세력이 되어 노동자·인민을 공격한 지 오래다. 남미 인민주의 정권은 정작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극우세력의 대항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개혁(혹은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자본주의 착취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도리어 극우 파시즘 세력이 발호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화 운동은 자본독재 시스템 속에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자본주의 틀 속에 가둬 버렸다.

4.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구별 정립해야 한다

1) 확장된 조합주의, 개량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지난 30년은 이른바 ‘진보정당’ 운동과 ‘산별노조’라는 ‘양 날개’를 실험한 과정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이 심각하게 왜곡·각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역사적인 계급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과학적 사상·이론 대신에 몰 계급적 소부르주아 썩은 사상이 서구 유럽에서 몰려 들어와 활개를 치는 형국이 되

었다. 그 사이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분할통제를 막힘없이 관철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등으로 표현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정치세력화”, “노동 중심 정치세력화” 논의는 기껏해야 체제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개량주의 정치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운동은 확장된 조합주의 정치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력 판매조건을 둘러싼 투쟁’에 한정 짓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 온갖 사민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을 걷어내고, ‘노동해방-민중해방-민족해방’을 향한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시기와 80년대 혁명적 노동운동이 가능했던 조건은 혁명적 주제(조직)와 대중운동의 결합이 그 수준을 막론하고 존재했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상·이론을 재정립하고 변혁적 정치운동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 변혁의 경로와 노동자·민중의 좌표가 대중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 변혁이론을 지양·발전시키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변혁적 전망을 다시 움켜쥐기 위해서는, 당시 변혁적 전망의 상실 계기가 되었던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평가”는 필수 항목이 되었다. 당시 미완의 변혁노선으로 분열이 굳어진 NL-PD-ND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 우선, 정치세력화, 정치활동의 상과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당장, 매시기 전국적인 계급투쟁 전술을 운용할 혁명운동의 실질적 참모부가 없다. 독점자본의 비둘기파에 기대든 그렇지 않든, 단 한 석이라도 챙기려는 ‘진보정당’ 운동이 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의 정치 행위도 모두 협소한 노동자주의, 그 경제주의·조합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정치운동의 현주소다. 선거국면을 이용한 정치활동이 조합주의적, 개량주의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 정치의 상도 그에 조응하여 뒤집혀 있다. 그렇다면, 당면한 무엇인가?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그 정치활동의 개념과 상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이를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진지한 역사적 평가와 토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험과 유럽 사민주의 정치의 배경과 한계, 남미의 이른바 핑크타이드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단결을 도모할 정치활동의 개념과 상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선거 시기에 후보를 내든 그렇지 않든, 매시기 정치활동의 분명한 원칙은 가능한 모든 연단을 이용·설치하여 전술한 사회주의적 정치·선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전술 운용 주체가 부재한 조건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활동은 할 수 있는 한 공동실천을 조직하여 다양한 방식의 전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대중운동의 경향적 급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혁명운동의 코어가 형성·강화되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

5. 정치·사상적, 조직·실천적 구심 없이 조합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1) 관건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대자적 계급의식 형성

노동자계급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또한 발전하고 있는 객관적 존재이다. 문제는 경제적 의미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보유하고 또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즉자적 계급에서, 즉, 존재적 의미의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정치적 계급으로 발전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형성이다. 대자적 계급으로 되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사회에서 어떤 처지를 의식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출발이다. 노동자계급과 자본독재 권력과의 적대적 관계, 제국주의와 인민과의 모순관계, 그로부터 노동자국제주의 인식 확보, 노동자계급과 여타 민중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형성이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존재, 즉자적 존재를 넘어서서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대자적으로, 정치세력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 발전의 과정에서, 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노력이 당 건설에 집중되어야 한다.

2) 현실 노동운동으로 돌아와 보자! 과제가 너무 많다.

하나는, 역사와 사상·이론 영역에 관한 것이다. 맑스-엔겔스, 레닌을 죽은 개 취급하는 현실 풍토에서 과학적인 역사와 사상·이론의 복원과 대중화 과제,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지양·발전의 관점에서 분석·연구하는 과제, 1990년대 초반에 중단되었던 변혁론을 지양·발전시키는 과제, 그리하여 정치활동의 준거가 되는 정치노선(강령), 조직노선, 전술과 그 현실성 확보의 문제, 이론적인 노력을 통해 자본주의적 지배 관계의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대안질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내는 이론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둘은, 투쟁을 강요하는 구체적인 정세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정확히 읽어내고, 다양한 연단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강요받는 경제적·생존권 투쟁을 노동자들이 과학으로 무장된 정치적 투쟁과 조직화로 발전시켜 가게끔 하는 것, 조직적·전략적 운동을 확대해 나갈 선진노동자 주체가 문제다. 당장은 활동가들 사이에 가능한 최대치의 협력을 통해 대중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활동가들의 훈련에 대해서는, 의식과 역량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상향평준화(성장)를 도모하고, 전략적 과제에 대한 차이는 논쟁과 공동실천을 통해 좁혀 나가야 한다.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선진노동자들이 사회과학 학습을 당연시했던, 가능한 연단을 활용하여 정치선동을 조직했던 운동 문화를 오늘날 현실에 복원해 내야 한다. 그 여러 면에서 설익었던 시대적 한계를 넘어 역사적 전진을 도모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3) 혁명운동의 참모부 건설은 역사적 과제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과 함께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치·사상적, 조직·실천적 구심이 없는 조건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모두의 고민과 토론 과제로 넘기며 나열한다.

- * 과학적 사상·이론 학습, 정립, 복원과 대중화 작업 (물 계급적 소부르주아 이론 극복)
- * 이론지와 노동자 정치신문 등 선전·선동 매체 연단 조직과 배포체계, 대중화 노력
- * 변혁적 부위 간의 긴밀한 공동실천 조직화: 선진활동가와 대중조직 내용적 침투
- * 혁명의 지도부가 부재한 조건에서도 매시기 정세분석에 근거한 올바른 안내 방침 생산
- * 학습 소모임과 구체적 실천의 결합 (80년대 방식)
- * 지역과 현장에 활동의 거점 또는 진지 구축, 상호 효과적인 협력과 연계
- *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 지도부 확보하여 대공업적 정치교육과 훈련 조직
- * 모든 일상 활동이 변혁적 주제 형성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
- * 등등

6. 노동자의 ‘계급의식-정치의식’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 (이하, 토론)

1) “지배계급의 사상은 어느 시대나 지배적인 사상”

존재를 배반하는 이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것이 되었을까? 맑스는 “지배계급의 사상은 어느 시대나 지배적인 사상”이라고 했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은 정신적 생산수단을 마음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국가는 공교육체제와 과정을 통해 반공, 안보, 질서, 국익, 국가경쟁력 등 지배계급의 이념을 가르치고 내면화시킨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은 독점자본에 딱 맞는 인간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짜여있다. 교육체제만이 아니다. 자본이 장악한 대중매체로부터 늘 ‘존재를 배반하는’ 판단의 근거를 주입 당한다. 독점자본의 ‘짜라시’는 매일 아침에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으로 배달된다. 공중파 TV와 라디오에서부터 조-중-동 등 종편 TV까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생산수단은,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지배계급의 사상을 전 부면에 걸쳐 반복적으로 쏟아낸다. 이 사회가 계급 적대에 기초한 사회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마무시한 노동자 민중이 학살당한 한국현대사의 이면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지배계급은 객관적 진리로 포장된 지배세력의 관점 또는 이념, 지배세력의 주관성을 노동자 민중에게 반복적으로 내면화시킨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의 사상은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

2)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정치의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계급의식’,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정치의식’은 무엇인가? 계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 사회적 노동 조직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적 부에서 자신이 유용할 수 있는 몫의 크기 및 그 획득방식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거대한 인간집단을 계급이라고 한다.”(레닌) 계급 구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한 인간집단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이다. 모든 특징은 이로부터 파생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진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착취의 관계이기도 하다.

계급의식이란, 일정한 생산관계에 놓인 계급의 공통된 이해 때문에 형성된 의식으로서 자기 계급의 연대성 기반이 된다. 맑스는 경제적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같은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즉자적(即自的) 계급이라 부르고, 이러한 즉자적 계급이 계급의식을 통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것을 대자적(對自的) 계급이라고 불렀다. 즉자적 계급이 대자적 계급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은 과학적 근거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여타 계급의 의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계급의식·정치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①노동자들이 전제정치, 억압, 폭력, 고약한 폐단 등의 모든 현상 형태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계급에 악영향을 끼치는가에 상관없이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정치의식일 수가 없다. 또한, ②노동자들이 다양한 계급들의 지적·윤리적·정신적 생활의 모든 현상에서 그 계급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근로대중의 의식은 진정한 계급의식일 수 없다. 또한, ③노동자들이 모든 계급·계층·집단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다. ④노동계급의 의식과 주의력, 관찰력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노동계급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정치의식”, “진정한 계급의식”은 선진노동자(간부, 활동가)들이 마땅히 훈련되어야 할 자질로 읽힌다. 이러한 의식과 역량이 노동운동에서 압도적 조류를 형성할 때, 비로소 노동자계급은 전 민중의 정치적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이, 이상적인 사회주의자(활동가, 노조간부)의 자질을 호민관에 빗대어 말하는 내용을 보자. “이상적인 사회주의자는 노동조합의 서기가 아니라, 전횡과 억압—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하건, 어떤 계급, 계층에 관계된 것이건 상관없이—이 ①드러나는 온갖 현상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 ②모든 현

상을 경찰의 폭력과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하나의 그림을 종합할 능력이 있는, 또한 ③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과 민주주의적 요구를 표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프롤레타리아트 해방투쟁의 전 세계적,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활용할 능력이 있는 그런 인민의 호민관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주장해도 충분치 않다”

3) 노동자 계급의식·정치의식의 발전경로

이제 노동자 계급의식·정치의식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각성·발전할까? “계급적 정치의식은 외부로부터만, 즉 경제투쟁의 외부로부터만, 다시 말하자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라는 영역의 외부로부터만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레닌의 이 유명한 테제는 어떤 의미일까? 자발성과 의식성은 어떻게 결합되는 것일까?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투쟁 과정에서 국가기구(노동부, 경찰, 법원, 의회 등)가 자본가 편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의식의 ‘섬광’, ‘즉자적’ 계급의식이다. 그 번쩍이는 계급적 직관만으로는 자본주의 계급적대 사회에 대한 역사적·포괄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역사와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데 해방의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없다. 따라서 자생적 경제투쟁을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그것만으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이 각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제투쟁에서 획득하는 ‘즉자적’ 계급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자체로는 “계급적 정치의식”이 될 수 없지만, 그 각각의 본질적 연관에 대한 ‘정치적 재해석’이 주어진다 면 달라진다. “노동대중의 활동을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레닌은, 경제적인 기초위에서만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폭로의 조직화”를 강조했다. “포괄적 정치폭로는 세계 사회민주주의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했다. “즉각적으로 설명하는 생생한 실례와” “이러한 포괄적 정치폭로는 혁명 활동에서 대중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경험은 ‘과학적·정치적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포괄적 인식’으로 안내될 수 있다. 그것은 “노동대중의 활동을 끌어 올리는” 활동이고,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활동’이고, 자생성에 의식성이 결합하는 지점이다. 그 수단이 곧 정치교육, 정치선등, 정치폭로를 조직하는 것이다. (“…모든 측면에 대해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다.”

7.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태도

1) 총선 분위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비례연합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정치세력은 국회 의석을 둘러싼 경쟁과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다. 2월 13일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1차 회동을 하고 사실상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약칭 ‘민주연합’) 결성에 합의했다. 녹색-정의당은 내부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2.17) 노동당은 울산 동구에 후보를 내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 승리”(?)를 걸고 활동의 중심을 총선에 두고 있다. 지난해 합의한 ‘정치-총선방침’에 반하여 민주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당에 대해, 민주노총 지지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은 매일 시시각각으로 보수정치권의 동향을 보도하고 전 민중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 유일하게 18세 이상의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시기 아닌가.

한편, ‘체제전환 운동’ 포럼과 정치대회를 준비하는 흐름도 포착된다. 새로운 유행어로 떠 오른 ‘체제 전환’, 그 내용이 궁금하다. 온갖 종류의 ‘사회주의’가 운위되고 있다.

2) 부르주아 민주주의

저들은 의회를 ‘民意의 전당’이라고 휘장을 친다. 그 民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자신을 지배할 자에게 투표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한번 선출되면, 일관되게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점자본만이 유일한 그들의 民이다. 지배계급의 정치위원을 선출한다는 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노동자·인민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독재,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다. ‘선거권’ 행사는 결국 자신을 지배할, 독점자본의 정치부대를 선출하는 데 행사한다. ‘피선거권’은 부르주아 정치가 금권정치라는 사실로 인해 노동자·인민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너무 높다. 자본이 마련해 놓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제한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확장해 가야 하는 성격이 동시에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본권을 가로막는 악법을 비롯한 온전한 정치사상, 결사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선거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관점)

선거 시기에는 노동자·인민의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리는 특별한 시기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량과 조건에 따라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후보를 내든 아니든 자본독재를 타도하고 그 극복을 위해 자주적·독자적인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선만을 위해 표를 구걸하는 선거운동은 노동자 계급정치가 아니다. 주요한 활용 내용은 사회주의적 정치선동의 조직화다. 그동안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성장과 진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때다.

그렇다면, 모든 인민의 눈과 귀가 선거에 쏠리는 선거 시기, 자본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정치활동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선전·선동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성장과 확대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의사결정과 집행이 노동자·인민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노동자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해야 한다.

*자본독재가 빚어내는 온갖 참상과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계급적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인민의 처지, 국가와 자본, 제국주의 세력과 인민 간의 적대관계와 노동자 국제연대의 소중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인민의 절박한 요구 해결은, 자본독재 하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왜 불가능 한지 구체적·포괄적으로 선전·선동해야 한다.

*오직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노동자·인민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노동자 국가 건설만이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을 구성원들이 풍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우지만, 노동자·인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것, 차이가 차별로 되는 악습을 끊어내는 것. 역사 발전의 유일하고 필연적인 길은 오직 절대다수 피지배 노동자·인민의 각성과 단결, 국제적 연대를 통해 그 전망을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모든 권력을 노동자 계급에게로…!’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운동 확대를 위한 제언”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들어가며

-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단일화와 정책연대건, 다시 자본가 정당과 소위 ‘진보정당’의 연대연합이 전면화하는 지금의 양상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어떤 이념, 주체, 수단에 의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한다.
- 현 상황이 사민주의와 의회주의, 나아가 자본가계급과의 동맹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을 추구하는 물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면, 위기의 해소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투쟁정당의 실물화, 혹은 그를 향한 자원과 의지가 모이고 있음을 실천으로 입증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 돌아보자. 민주노동당 이후 ‘진성 노동자 당’의 유일한 모델은 산별노조와 (유사)사민주의 정당의 역할분담론, 즉 양날개론이었다.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한 양날개론의 강제 관철, 그렇게 집중된 자원을 지렛대로 이루어지는 자본가정당과의 동맹노선 전개. 그 반복에서 비롯하는 노동자정치의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노동대중의 회의. 우리는 이런 조건 위에서 전면화하는 체제의 위기를, 또한 ‘진보정치’의 반복적 파산을 새로울 것 없이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실력이다. 체제의 위기는 깊고 과제는 막중하나, 역량은 미약하다. 단호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갈 때다.
- 토론자로서, 우선 제출된 발제문에 큰 틀의 동의를 밝힌다. 다만, 노조 주도 당건설 노선과 대별되는 ‘계급정치’를 실물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실천 방향, 또한 계급정치를 실물화할 ‘이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노총 주도 노동중심 단일정당 건설이라는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야권연대라는 외견상 모순적인 행보를 보자.

2.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동전의 양면, 양날개론과 야권연대

1) 의회주의 노동자정당에서 연립정부 지향 국민정당으로 - 민주노동당 파산은 민주노동당 성장의 결과

- 잠시 민주노동당을 돌아보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1996-97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에 나선 결과로 만들어졌다.¹²⁾ 노동자계급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총파업의 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극복을 목표로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계급투쟁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건 일정히 반영한다.
-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귀결은 거듭된 보수야당과의 선거연대에 이은 민주당 계열 분파와의 합당을 통한 통합진보당 창당이였다(‘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지방선거 이래 야권연대가 노골화했고(반MB 야권연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극

12)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의의 관련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은 체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국민후보를 추대,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키로 결의한다. 2.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부터 중앙정부까지 ‘공동정부 구성’이 음양으로 운위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 내부 갈등에 이은 분당을 재통합하는 과정과 맞물렸는데, 이를 종합하면 <진보대통합-야권연대-정권교체와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전망이었다.

- ‘비판적지지’를 넘어 ‘민주당과의 공동집권’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 2010년경까지 유지되던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소위 통진당 사태와 함께 스스로 폐기되었다. 이후 선거철이면 민주노동총 전현직 간부들이 집단 입당원서를 들고 민주당에 투항해도 징계조치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민주노동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통해 ‘진보정당’의 국민정당화를, 또한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추기고 보조했다.
-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가 민주노동당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노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는 물계급적 사민주의-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다. 의회주의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한, 노선을 바꾸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함께 우직히 전진하는 민주노동당은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한 학자가 진단했듯, 이는 사민주의의 숙명이다.

“그들은 계급에 대한 강조와 국민에 대한 호소 사이에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 그들은 한탄하고 후회하며 그들의 전략을 바꾼다. 그리고 또 다시 한탄하고 후회한다.”¹³⁾

- 이런 점에서, 2023년 9월 민주노동총 정치-선거방침과, 위성정당 참여 및 지역구 선거연대로 노골화하는 ‘민주노동 지지정당’의 현 국면 민주당과의 연대는 일견 모순이나 동전의 양면이다. 2010년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가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 중 전략은 야권연대-연립정부 구성이고, 전술은 진보대통합이었다. 현재로 보면 전략은 반윤석열 인민전선이고, 전술은 민주노동총 주도 단일 연합정당 건설이다.¹⁴⁾

2) 양날개론은 무엇을 결과했는가

- 출범 당시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주도로 의회주의 진보정당을 만들어 집권하겠다는 사민주의 노선에 근거했는데, 그 구체적 전략으로서 ‘양날개론’은 산별노조의 경제투쟁과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정치투쟁이라는 역할분담론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음 결과를 야기했다.
- 첫째, 양날개론은 현장에서 정치를 추방한다. 역할분담론에 따라 현장은 경제의 공간, 의회는 정치의 공간이 된다. 노동현장의 과제는 임단협이 수행, 재정과 투표의 조직, 의회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물리력 동원으로 한정된다. 곧, 현장은 의회정당을 위해 돈과 사람을 대는 저수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필연적으로 현장정치활동은 빈다.
- 둘째, 공동화된 현장의 계급투쟁과 계급정치를 조합주의, 타협주의가 채운다. 양날개론이 의회 진출을 현장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로 상정하는 순간, 현장이야 어떻게 되건 현장의 돈과 표를 집중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 적나라한 예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정에서 ‘진보정치’가 작동한 방식이다. 이 ‘중재’ 이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념’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찬물’은 ‘25일 투쟁’ 후반기에 나온 야4당 중재안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점거농성을 끝 후 교섭하자’였다. 정규직화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이들에게 이 중재안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아니었다. 투쟁을 줄곧 가로막고 심지어 “협박”까지 한 이경훈

13) 아담 쉘보르스키,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14) 물론 현 민주노동총 집행부에 단일정당을 실현할 권위와 실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당시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주장해온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인 것일 뿐이었다. 야4당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포함돼 있었다.

- 「자본가는 피를 빨고 진보정당은 표를 빨았다」, 프레시안 2012년 5월29일

- 셋째, 배타적 지지방침, 즉 강제 단결이다. 산별노조-단일정당 모델에 근거해 현장의 정치적 역할을 돈과 표로 한정하면, 현장은 각 당의 노선차와 정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를 알 필요도, 자기 입장을 가질 필요도 없다. 즉, 현장의 무관심에 근거한 동원적 단결의 유도가 바로 배타적 지지방침이다. ‘아, 잘 모르겠으니깐 하나로 만들어와!’, 물론 이는 가장 본능적인 정서다. 이러저러한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서 ‘단일 진보정당 건설’이 늘상 압도적인 요구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동이 현 상태를 지양하는 것이라면, 정치세력은 이런 정서를 강제 단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와 싸워야 한다.

3. 사회주의 이념의 정립, 사회주의 정치의 정립을 위하여

- 노조 주도의 (유사) 사민주의 정당건설, 그 한계적인 노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실과 단절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결국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주장일 것이다.
- 그러나 노조 주도 의회주의 단일정당 건설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도적 인사들이 이념에 근거한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이 ‘이념에 근거한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실천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의 현재가 조직적 무능력이기도 하고, 이념적 무능력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이념은 이미 존재하고, 그 적용이 남아있는가? 아니다. 이념에 근거하지 않은 운동은 없다. 민주노총 주도 단일정당 건설운동도 특정 이념에 근거한다. 이념적 무능력과 조직적 무능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념에 근거한 대중적 사회주의 정치실천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아가 이념 자체가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급정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사회주의 운동을 실제로 세우기 위한 당면 과제로, 우선 다음이 필요하다.

1) 민주노총을 전 계급적 투쟁기관으로 세우는 과정

- 먼저, 노조 주도 당건설이 한계적이라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투쟁과 정치가 전 계급의 고통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현재는 그러하다.
- 그러나 민주노총이 여전히 계급투쟁과 계급정치의 중요한 자원이라면, 또한 사회주의 계급정치의 발전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을 전 계급의 투쟁기관으로 세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 필자의 불민함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필자는 발제문 논지에서 이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면화하는 위기의 시대, 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곧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계급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이 일정한 틀을 갖춘 상태로 우리의 호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면, 노조운동의 계급적 재구축 과제, 그 중요성이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구축은 단지 전투적 노조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 돌아보자. 2010년 지방선거 이래 노골화한 야권연대와 통진당 사태에 이은 배타적 지지방침의 자기붕괴 이후,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2016년 선거를 겨냥해 2015년 경 이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총파업-총궐기 운동과 최저임금1만원운동 등 전 계급적 투쟁과제를 제시한 민주노총의 실천적 권위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민주노총

이 정치-선거방침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은 올바른 정치-선거방침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계급정치’와 상충하는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촉진할 것이다.

- 노동자계급은 투쟁으로 세력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정치투쟁으로 정치세력이 된다. 전체 계급을 향한 운동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주요한 매개는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구축과 땀 수 없다. 사회주의 노동자 투쟁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계급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조운동, 여성-저임금노동자-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노조운동, 국가와 자본이 만든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조운동,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서는 노조운동을 세워야 한다. 이는 계급 전체를 조직하는 과정의 일부다.
- 아래는 2023년 5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¹⁵⁾.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정규직 사업장 노동자가 100원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43.7원을 받는다(시간당 임금액을 보면 평균치가 체감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과제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단위: %, 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준	시간당 임금
300인 이상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37,783
	비정규직	63.2	64.5	68.9	69.1	65.3	24,672
300인 미만	정규직	56.8	57.0	57.3	58.6	57.6	21,758
	비정규직	41.8	42.7	44.5	45.6	43.7	16,520

2) 진영론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념으로서 사회주의를 세우는 과정

- 다음으로, 이념의 중요성을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하등 어색할 것 없는 정세, 전면화하는 위기와 제국주의 열강 투쟁의 시대다. 그 반영 중 하나가 운동진영 내 진영론 확산이다.
- 지금, 운동진영 한켠에서는 미국 주도 세계질서 불가피론(소위 규칙기반 세계질서론)이 운위되는가 하면, 북중러 블록을 모종의 반제-사회주의-민주기지로 여기는 진영론도 있다. 제국주의 블록 간 투쟁이 전면화하는 지금, 한 블록의 존재와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대중 앞에 해석하고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양상한 진영론으로 만든다. 당장 핵 보유를 평화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착적이다. 이런 주장은 극우파 주장의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 국가원수가 ‘핵 기반 한미동맹’을 운위하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새롭지도 않을만큼 일상화하는 지금에도 한국 대중은 반제반전투쟁에,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냉소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념에 근거한 대중적 정치투쟁의 부재를 드러내며, 또한 그 절실한 필요를 드러낸다. 이념에 근거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은, 바로 이런 현실과의 진지한 대결 과정이다. 오도된 진영론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3)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노동자계급’, 그 오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치활동

-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부르주아에게 내맡기지 말고, 노동자계급이 당면 민주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한다고, 모든 억압에 앞장서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레닌은 말했다. 그 주장처럼, 노동자계급의 모든 억압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억압을 철폐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는 바로 그 과정과 함께 형성된다. 사회주의 운동을, 그리고 노동

1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045

자계급을 인민의 호민관으로 세우려는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다.

- 특히 여성억압을 철폐하는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한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라클라우나 무페를 비롯한 급진민주주의 좌익포퓰리즘 이론가들의 ‘등가적 연대’ 노선, 혹은 포 데모스식 정치노선과 판이하게 다르다.

4) 위기 심화, 정세에 조응해 현장분회운동 확대를 모색할 때

- 노동의 공간이 곧 투쟁의 공간이고, 정치의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그간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주요 노선이었던 현장분회(세포)의 경우, 단지 구획하는 것으로 분회운동이 확대는커녕 유지조차 되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배워왔다.

“전전(戰前)의 러시아에서는 유럽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시기 전체를 특징지었던 거대한 노동자 조직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당이 노동계급의 모든 결정적 이해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이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의 실제적 정언명령이었다. 공장과 가두의 세포들은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노조의 투쟁에서 그리고 짜리즘의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 모두에서 대중들을 이끌었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노동계급의 노조조직과 정치조직 간의 분할이 더욱 심화되었다. 노조 진영에서는 개량주의자들과 평화주의적 경향이 급속도로 힘을 얻고 있었다 - 또는, 환언하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였다. ... 대중기관들이 노조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자본주의와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전체 투쟁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확실히 우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은 러시아 볼셰비키가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의 반동적 세력뿐만 아니라 노조 내의 개량주의자들의 반동적 세력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 그람시, 당의 조직적 기반 (1925.8.15.)

-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조직하고자 하는 상당수 일터에는 이미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이 있다. 사업장 현안 대부분이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조직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조직에서 활동하며 해당 공간을 이끌고 조직하고자 노력한다. 노조-현장조직 외부에서 추상적 선전활동에 그치지 않고자 한다면,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결정과 질서를 존중하며 내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 주요 난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노동조합과 활동가조직이 제반 투쟁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이기에, 분회가 현장투쟁을 매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분회가 일상적 현장투쟁 조직기능을 포괄하고자 할 경우 분회는 활동가 조직과 경합하게 되며, 이는 양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현장조직은 활동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대중을 모아 일상 투쟁을 조직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 이런 점에서, 현장분회의 공개 정치운동은 통상적 현장투쟁보다 더 의식적인 싸움을 제기하는 것, 사업장을 넘어 지역과 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현안을 해설하고 과제를 제시하며, 연대를 추동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도 이는 활동가 조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과 준비를 요할 수밖에 없다. 분할된 노동계급의 상황 상, 주변의 냉대를 견디는 강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분회의 구성과 확대는 분회만의 몫이 결코 아니다. 또한, 현장분회의 조직구성 역시, 노동자의 존재-노동조건에 따른 구축시도가 행해져야 한다. 네트워크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현장분회, 서비스-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지역현장분회 등을 구축해야 현장정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 분회 구성과 활동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현 정세를 빼놓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함께, 현 정세는 전 계급적 생존권 쟁취투쟁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간극을 상대적으로 좁히고 있다. 파산과 산업재편에 대응하는 투쟁,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

는 투쟁의 경우, 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정치적 자신감 자체가 생존권 투쟁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생존권쟁취 정치투쟁을 제기하며 현장정치활동의 공간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강령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득해낼 조직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노동자 정당'의 가능성은 실물화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자본독재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노동계급 정치운동이 나와야 한다”

조상수(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공동대표)

1. 한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요원한가?

한국사회 임금노동자의 수는 2,174만명이다(2023년 12월 기준 통계청 고용통계). 전체 취업자 2,809만명의 77%(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짐)로 그 가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 5,133만명(2023년 12월 기준 행안부 인구통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제도정치 영역이든 정치사회운동 영역이든 노동현장이든 존재감도 기대감도 줄어들어 왔다. 분단사회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가 120만명으로 성장하고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치운동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 성장하기는 커녕 실종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계급정치의 가치는 협소하거나 낮은 것이고, 계급 내 계급으로 불릴만큼 노동계급의 내부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계급정치 전략은 실현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착취도를 강화하고 분할지배를 고도화하는 자본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치체제에 맞서는 노동계급정치를 무장해제하고 패배주의로 빠지게 하는 잘못된 입장이다.

노동계급정치는 말 그대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는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자본의 착취를 축소, 통제하는 것(당면 이해와 요구)으로부터 자본의 착취를 근본적으로 철폐(근본 이해와 요구)하는 것까지 여러 층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정치는 근본요구의 상이나 실현 경로를 둘러싼 특정 이념과 노선을 실현하는 의미에서의 이념정치 또는 정파정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본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이념(자유민주주의)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항 이념과 노선을 연합하고 통일시켜 정치적 힘을 최대화해 집권으로 나가는 노동계급의 정치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본계급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보수주의, 자유주의)에 맞선 노동계급 이념의 전통적인 양대 지형으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어 왔다. 노동계급정치는 전통적으로는 노동계급 양대이념의 통일전선으로 나타났고,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 조건에서 전통적인 이념지형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색이 일어나며 급진좌파연합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 노동계급정치는 2천5백만 노동대중을 계급적으로 단결시키고 정치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대중정치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정치는 노동운동 좌파가 아니라 한국사회 좌파를 향해 나설 때 대중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계급의 분절화, 파편화로 경제투쟁만으로는 계급적 단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이 조장된다. 계급적 단결 후 정치투쟁으로의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정치투쟁과 맞물려 계급적 단결이 확대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정치가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된 가치 지향을 포괄하는 정치사회적 투쟁과 함께 노동계급의 확장된 진보가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중정치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는데는 계급정치운동의 실종도 있지만 소위 의회주의로 불리는 변혁정치운동의 실종 문제를 살피는 것이 더 선차적일 수 있다. 한국사회는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부터 윤석열 정권의 반동까지 정치적인 격변기를 경과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패권을 정점으로 G7+(Global North)와 BRICs+(Global South)간의 정치경제블록화 대결과 함께 러우전쟁.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전쟁에 이어 양안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는 핵 대결고조와 함께 북이 지난 70년간의 대남노선을 전환하였다. 2024년 총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동당 주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진보정치운동이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도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의회주의 20년이 역설적으로 진보정당의 원외정당화 우려와 함께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합류라는 궤도이탈을 낳고 있다. 의회주의가 격변기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부상의 기회가 아니라 존폐의 기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보수양당체제로 노동정치가 수렴되느냐 지난 실패의 원인을 극복하고 계급정치운동과 변혁정치운동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 새출발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제6공화국 30여년 동안 한국사회는 최악의 불평등과 기후악당 국가이자 지속불가능한 소멸 국가가 되었다. 거대 보수양당은 정권을 번갈아 향유하면서 내로남불과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었다.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사기였고 노동계급정치도 체제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일당독재에서 양당독재로,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바뀌었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극대화되고 자본계급과 보수정치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만큼 격변하는 시대에도 한국사회의 진보정치와 노동계급정치 운동은 그 기개도 그 실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실천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이전과 달라진 실천운동과 주체형성을 통해 노동계급정치가 한국사회 민중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2. 87년 민주화이행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정치와 민주주의 정치

1) 87년 민주화이행(87년 체제)과 민주주의 정치

87년 민주화대투쟁은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투쟁이었다. 6.29 선언을 통해 군부세력이 후퇴하여 직선제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형성된 것이 87년 체제이다. 한국사회는 87년 체제가 등장한지 30여년이 흐르면서 체제전환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으로 나가지 못했다.

87년 정치체제는 현재 국민의 힘과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보수양당 간에만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고, 진보 정당의 성장은 철저히 봉쇄하고 체제내화는 것이었다. 정치민주화의 수준은 일반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부르조아민주주의에도 현격하게 못미쳤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사상이념의 제한),노동악법(정치파업의 금지), 공무원악법(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은 철폐되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해 온 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검경 기구는 해체되거나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다. 지자체, 교육감 선거는 실시되고 있지만 경찰청장,검사장,법원장 등 형사사법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고 있다. 지역당,연합정당 등 소수정당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치악법(전국적 정당설립 요건,이중당적 금지, 높은 교섭단체 요건, 의석 중심의 국고보조금 등)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선투표제, 연동형비례제 등 소수정당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선거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연동형비례제조차 위성정당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무력화되었다. 진보정당에게 정치

선거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쪽문으로 검열을 받고 들어가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운동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시절 10명, 통합진보당 시절 13명 까지 의원을 배출했지만 교섭단체의 문까지 열리지는 않았고, 헌법안의 진보를 자임하면서 체제내화하거나 국가보안법 탄압이나 정당 해산으로 배제되었다.

노동계급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와 노동계급정치는 의회주의가 아니라 변혁정치일 때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7년 민주화 체제가 제한적 민주화체제이고 정치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경제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은 정권교체가 가능하진 부르조아 정치세력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정치의 관점에서는 노동자 민중에게 정치민주화를 제한함으로써 한국사회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기본권 확대는 고사하고 자본독재와 각자도생으로 퇴행했다고 판단된다.

87년 체제에서 한국사회 부정부패와 독재의 온상이었던 재벌은 해체되지 않았다. 재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경제력 집중을 극대화했음은 물론이고 대학, 언론,관료,정치인 등을 장악 또는 포섭하여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고히 함으로써 소위 민주화 이행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재벌과 관료는 노조의 산별교섭과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산업 및 공공부문 운영 독재로부터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미국 같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심화되었고, 저출생율,노인빈곤율,자살율 등 주요 사회지표 역시 세계 최악 수준으로 헬헬조선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국가가 되었다.

제6공화국의 제한적 정치민주화 체제는 한국사회를 일당독재에서 양당독재로,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자계급이 완전한 정치민주화와 경제사회민주화까지 민주화이행을 밀고 나가는 위력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87년 체제를 타파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2)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정치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 정치는 사회주의, 사민주의, 좌파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다. 각국에서 노동계급정치가 부상하거나 집권하더라도 아직 보편적인 모델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봐야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사회 노동계급정치에 대한 판단 역시 특정 유형에 대한 비교나 개념적 구분이 아니라 역사적,운동적 조건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노동계급정치의 핵심이 구현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경우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 사실상 처음이다. 1992년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준위가 있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민중당과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당명이 당의 성격과 주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당이라는 명칭이 계급정당으로의 지향을 나타낸다고 할 때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명멸하고 있는 수많은 진보정당의 명칭에 비추어도 한국사회에서 대중적인 노동계급정치 시도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을 지향했는지, 계급정당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정치에 대한 판단의 주요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시작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본격화를 가져왔지만 바로 한국사회에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운동을 등장시

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전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 지향적이어서 경제투쟁만이 아니라 정치투쟁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노동자정당이 미발달한 상태에서 노조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출현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정치운동에서 조합주의가 아닌 사회정치적 운동의 지향을 갖는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발전이 갖는 중요성은 브라질의 신노조운동이나 칠레의 사회정치적 노조운동과 결합해서 브라질 노동당이나 칠레 급진좌파 정치연합이 집권에 성공한 사례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필두로 4.19 이후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민주화 대투쟁 이후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은 있었지만 노동당이라는 계급정당의 시도가 늦어진 것은 노동계급 정치운동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파를 망라하여 구성되어 전노협 결성에 산파역할을 하였고 전노협의 사회변혁지향적 노조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노동계급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중당 지지 또는 민주당 비판적지지 등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정파별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였다. 당시 노동운동단체 안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진보정당 운동보다는 전선체운동이나 전위정당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입장, 독자적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보다는 민주대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입장 등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정치노선을 통일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은 분산되었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통일적으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대중적 힘을 갖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출범한 민주노총이 1996~7 노동법개정 총파업으로 한국사회에 노동자 정치투쟁의 힘을 보여주고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대중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대선후보로 출마하였고 국민승리21을 거쳐 민주노동당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물론 민주노총이 주도하였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만 만든건 아니었다. 민중정치연합과 같은 진보정치단체가 함께 만들었고, 이후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면서 주요 정파들도 합류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이 되었고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87년 이후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에 진입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정당과 노동조합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역사나 운동 조건에 따라 노동자 정당이 주도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 이념 지형이 압도적으로 크고 악법이 엄존하는 조건에서 대중조직의 힘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동계급정치의 시도도 여의치 않았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을 이끄는 것도 노동운동가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조직적 주체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보아야 하지만 노동자 정치투쟁을 누가 주도하고 그 정치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주노동당 건설 이후 얼마가지 않아 그 주도성이 민주노총에서 정파로 넘어갔다는 점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노조 주도에서만 찾는 것은 일면적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정치방침을 정하므로써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조직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을 표방했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대표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사민주의

정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계급정치 지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돌아보아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제한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제도정치로의 진입하는 노력에 비추어 온전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법 철폐 정치투쟁 전략,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법 저지와 재벌해체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치투쟁전략,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전략을 주요한 정치 및 조직 전략으로 세워서 자본계급과 보수양당의 변화를 이끌어낼만큼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활용이 아닌 의회주의로 귀결되었다는데 있다. 노동법개정 투쟁 과정에서 정권이 노조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한 대신에 정치파업의 자유는 금지한 맥락,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합법화 하는 대신에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으로 나가지 않고 의회주의로 체제내화하는 정치적 포섭전략이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변혁적 정치투쟁 전략이 우선되지 않음으로서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되고 노동계급정치는 형성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전력을 다해 만들었지만 전노협이 만들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같은 진보민중진영의 정치투쟁체는 만들지 않았다. 사회변혁적 정치투쟁보다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막지 못했고, 의회주의 및 실리주의의 확산과 계급적 연대의 약화가 악순환되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계급적 영향력,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축소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정파간 패권주의와 노선 갈등을 통해 진보신당이 분화하면서 각 당은 노동주도의 정파연합이 아닌 정파 주도의 당으로 전환하였다. 당 이념도 진보적 민주주의, 사민주의 등 정파 노선이 분명해지며 노조 주도 시기보다 계급정치 이념에서 후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화 이후 민주노총은 소위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으로 진보대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 창당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만이 아니라 의석 확장을 이유로 민주노총안에서 반대가 있었던 자유주의 정치세력 국민참여당까지 참여하였다. 그야말로 계급정치의 경계가 사라진 정파연합당이었다. 그 결과는 2012년 비례부정경선 사태를 계기로 한 통합진보당의 조기 분열이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철회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분화된 진보정당은 다시 정파정당화 되었다. 정파정당화 된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급정치전략을 복원하기보다는 원내정당으로의 존속이나 대표진보정당 경쟁에 나서면서 더 의회주의화되거나 정파정당화 되는 길을 걸었다. 보수정당과의 야권연대가 의회진출의 주요전략이 되었고, 보수정당과의 개혁연대 역시 의회진출 확대가 중심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투쟁이 선행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정치개혁이 분명하지 않은 후보단일화 중심의 야권연대나 계급정치적 독자성이 분명하지 않은 개혁 연대는 진보정당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2중대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오랜기간 정치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선거방침으로 진보정당의 범주를 정하여 지지해왔는데 현재는 진보4당으로 불리는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이그 대상이다. 진보다당화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계급투표를 어렵게 하였고 계급정치를 대표하는 진보정당 부재로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선거투쟁마저 계속 후퇴하였다.

따라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건설로 한차례

대중적 시도와 일정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정권의 신자유주의체제 포섭전략을 타파하는 계급정치운동과 변혁정치운동 역량의 취약으로 의회주의,정파주의,자유주의 정치세력 종속이 심화되며 계급정치를 제대로 형성도 못한채 후퇴와 실종의 길을 걸어 왔다고 판단한다.

3. 현재 민주노총+ 4개 정당 선거방침 등 정치전략

민주노총과 진보4당의 총선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실종 위기에 직면한 민주노총부터 새로운 정치방침을 세우고 총선에서 진보4당과의 계급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진보4당과의 관계에서 전혀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원내 정당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취지에 반하는 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등 가장 퇴행적인 야권연대의 모습까지 나타나며 독자적인 진보 정치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 존폐 위기로 가고 있다.

1)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4일 임시대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 11년만에 새로운 정치방침을 세웠다.

첫째,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넷째,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와 같이 정당에 대한 지지에 국한된 정치방침이었으나, 새로운 정치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노동자집권과 사회변혁)와 방향(직접정치,광장정치,연합정치),전략(체제전환과 정치개혁 투쟁,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포괄하는 정치방침으로 한 단계 발전되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 안에서 기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문제로 의회주의,대리주의,패권주의,노동중심성 약화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실패한 진보대통합 중심의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서 나아가 민주노동당 시절의 한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광장정치,직접정치,연합정치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나서는 방침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데까지는 주체적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현장간부 및 조합원과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대의원대회의 토론과 중집 조정을 통해 상층 수준에서 확정된 방침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와같은 정치방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 정파의 입장을 뛰어넘어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로 혁신해야 하는데 아직 계급정치 지향을 갖는 활동가들이 다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024 총선방침도 이전 후보단일화 중심의 진보4당 공동지지방침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에 입각해서 친자본 보수정당과의 절연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4당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합정당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넷째,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여년간 반복되어온 후보단일화 중심의 선거방침이 아니라 2024 총선에서 직접정치와 광장정치를 구현하기로 한 것은 대리주의와 의회주의를 극복하자는 실천이고, 연합정당 건설까지 진보정당과의 총선공동대응을 열어놓는 한편,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진보정치세력과 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실종 위기에 처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살려내기 위해 보수정당과의 절연을 분명히 하고 선거에서 계급투표 조직이 가능하도록 2024 총선에서부터 (선거)연합정당 수준으로 단결하고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 방침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공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4당과 총선방침 실천 노력의 공동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정의당 플랫폼 선거연합정당 제안의 중요한 계기마다 진보정당간 선거연합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준연동형제를 무력화시키는 거대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 위배되는 진보정당의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참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노력은 고사하고 입장표명 자체가 없었다.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퇴진, 보수양당체제 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광장정치투쟁도 위력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을 위배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철회 요구를 둘러싼 내용과 함께 총선투쟁이 무력화되고 총선 이후 연합정당 논의기구 구성 역시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정의당 + 녹색당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라는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했다.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평등 생태 돌봄 국가를 지향하며 노동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으로 확장하는 혁신재창당을 추진해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였

다. 민주노총의 계급투표 조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진보4당간 선거연합정당 보다는 부분 선거 연합정당, 신설 선거연합정당보다는 정의당 플랫폼 전략을 취했다. 의회주의 경향이 가장 강했던 정의당은 노동 현장과 지역 조직화 전략으로 성장해온 진보당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뒤졌고 당 지지율 축소와 함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이탈하면서 지역이든 비례든 총선 후보자체가 급감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원내정당 유지를 자신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총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 정당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의당과 원내 진입이 필요한 녹색당이 녹색정의당이라는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였지만 제3지대 주도권을 보수신당에게 넘겨준 현실에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보다 여전히 원내 정당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분명한 거부를 하였던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참여 논란까지 벌어졌다. 녹색당은 준위성정당 참여를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불참 결정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하였지만 민주당과의 정책연합, 지역후보 단일화 등 지난 시기 야권연대를 반복하고 있다.

3) 진보당

진보당도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4당 선거연합정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원탁회의와 함께 야권연대(반윤석열 민주진보대연합) 전략을 취해왔고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 비례후보 3명 배정과 울산 북구 단일후보가 되었고 호남과 대경지역을 제외한 지역구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통해 단일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조건을 감안하면 소수 의석으로 원내정당을 유지하는 것 외에 지난 총선 보다 지역구 출마자가 대폭 늘어난 진보당의 선거투쟁은 결국 호남과 대경지역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민주노총 당원을 가지고 있는 진보당이 원내정당 유지를 위해 그 방침을 위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표방해왔고, 노동과 지역 조직화에서 노력하면서 당 지지율을 조금씩 높여왔던 진보당의 이번 총선 전략은 야권연대의 역사에도 전례없는 준위성정당 참여로 새롭게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나서고자 하는 민주노총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4) 노동당

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연합정당 추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고,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도 법개정 투쟁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었다. 사회주의 정치대회 개최 등 이념적 독자성을 가지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정치전략을 우선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당의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참여 이후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에 의탁한 세력이 의회에서 진보정치를 대표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것이 정치전략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당의 조직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구 후보출마가 소수에 그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의회주의나 야권연대를 비판하면 원내정당이나 의석 확보 등 제도정치의 중요성이거나 구체적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비판이라는 반박을 많이 한다. 그런데 대중에게 최소한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노동자 민중 대표조직의 적극적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어찌 진보정치운동이고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여년 진보정치운동에서 패권주의,분파주의 문제의 뿌리에는 의회주의와 정파주의가 있고

그 의회주의,정파주의가 노동중심성을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진보다당의 왜소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종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정치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정치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인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거나 노골적인 의회주의로 궤도이탈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진보의 이름을 가진 정당의 원내 연명을 시켜 줄 수 있으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난관을 조성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번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기존 진보정당의 연합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으로 나가는 전망에 대한 지지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4.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구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급을 노동자라고 쓴 것은 대중적 표현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30년간 사용해온 용어이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의 이념과 노선이 없는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로 전락하거나 조직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그치는 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노동계급정치와 구별정립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 취지에는 동의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 노동계급의 파편화 조건이 조합주의로는 계급을 형성할 수도 없고 조직노동자들은 노동계급 안에서 소수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그 자체가 노조 주도 또는 조직노동자의 정치세력화나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 그런 한계를 보였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계급적,변혁적 발전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노총에서는 역사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고 새노총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계급적, 변혁적 발전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이라는 구호와 전략조직화, 체제전환 투쟁을 통해 계급지향성,변혁지향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계급정치운동과 변혁정치운동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할 때 전진할 수 있다. 미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언론과 조직의 영향으로 노동자 정치의식 형성이 어려우므로 노조 조직화와 지역정치운동 강화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계급적인 노조운동으로 혁신하고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주요한 조직 과제가 될 것이다.

진보는 상대적 개념으로 노동계급정치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고, 진보도 아니면서 진보를 참칭하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구별하기 위해 좌파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노동계급정치를 좌파로 규정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짜 진보, 가짜 민주주의 정치세력을 폭로하고 좌파야말로 진짜 민주주의, 진짜 진보세력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노동계급정치나 좌파정치가 대중적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정파정치(정당)를 노동계급정치(정당)로 연합 또는 통일시킬수 있는가가 노동계급정치가 한국사회의 좌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보수양당 독재, 자본독재, 분단예속체제인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자유민주주의,신자유주의,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정치세력을 계급적으로

연합 또는 통일시키고 좌파를 한국사회의 다수가 되는 진짜 진보와 진짜 민주주의 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5. 한국사회 노동계급정치운동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노동운동 좌파는 노동운동 우파가 자유주의에 종속되는 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좌파로 나아가고자 하는 담대한 전략이나 실행력 부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다른 실천에 나설 수 있다. 비판은 구별 정립의 시작이지만 대안 실천과 성취 없는 비판은 평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좌파는 대안실천운동의 성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1) 의회주의,정파주의,자유주의 정치와의 결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의회주의,정파주의의 폐해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동계급정치는 의회주의에 갇힐 수 없고,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이념적, 조직적으로 분명하게 독립해야 하며, 정파정치를 뛰어넘어 계급정치로 연합하거나 통일해야 전진한다. 지난 20여년의 의회주의,정파주의,자유주의정치종속이 진보정치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랜 관성으로부터 확실하게 결별하고 새출발할 때이다

2) 격변기 한국사회변혁(체제전환) 노동자대안의 수립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중정치투쟁의 전개, 계급정치세력의 연합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노동계급정치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모순과 보수정치의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격변기야말로 노동계급정치가 부상할수도 소멸할 수도 있는 전환기이다.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체제전환과 정치세력 대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동자 대중정치투쟁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 진보정치운동의 성찰을 통해 계급정치운동에 동의하는 세력을 광범하게 결집하여 집권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 대안정치세력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3) 2024 총선부터 윤석열 퇴진과 보수양당 독재 타파를 위한 광장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나설 계급정치세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2024년 총선을 계기로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투쟁을 고양시키고 친자본 보수양당독재 타파 투쟁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광장정치투쟁과 선거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총선투쟁과 함께 의회주의,정파주의,자유주의정치와 결별하는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노동정치세력 안의 계급정치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선언운동부터 대중적인 주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메모]

'2024년 이후' 정치토론회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 (달라야 하는가)

2024. 02.24(토) 오후3시-6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이 정치토론회는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에 서려고 한다. 과연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 지형에서 가능할지 타진하려고 한다. 정립을 통해서 기계적인 구별을 넘어서려고 한다. 취지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함께 하길 바란다.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노동조합정치와 좌파 계급정치: 2024년 총선이후
정치의 해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계급적 전망"

토론

토론자 1. 김형균 / 노동전선 공동대표

토론자 2. 백종성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공동집행위원장

토론자 3. 조상수 /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공동대표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org